

제367회 국회
(임시회)

국회 본회의 회의 의록

제 7 호

국회 사무처

2019년3월21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

1. 경제에 관한 질문

상정된 안건

1. 경제에 관한 질문 1

(14시05분 개의)

○**의장 문희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경제에 관한 질문

○**의장 문희상**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세 분입니다.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영상이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운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열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과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입니다.

지난 5일 우리나라의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돌파했다는 발표가 있었고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30-50클럽에 진입했습니다.

모두가 기뻐할 일입니다만 많은 국민들께서 체감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과실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포용적 성장을 추구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총리 나오시지요.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감사합니다.

○**최운열 의원** 대통령을 보좌하여 국정을 총괄하고 계시는 총리께서 오늘 우리 경제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우선 성과와 가능성도 있고 만만치 않은 과제에도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과와 가능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국가 신용등급이 사상 최고로 올라갔고요, 외환보유액이 사상 최대로 올라갔습니다. 국가 부도 위험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게 개선됐습니다. 성장률은 OECD 상위에 속하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극화와 고령화의 문제가 있고 또 경제에서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빨리 회복할 것인가, 서비스업을 우리 수준에 맞게 어떻게 빨리 고도화할 것인가, 신산업을 얼마나 빨리 활성화시킬 것인가 하는 등등의 많은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운열 의원** 그런 가운데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많은 국민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께 총리로서 한 말씀 하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늘 가슴이 아픕니다. 저희들의 정책의 목표랄까 하는 것은 ‘포용국가’라는 용어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국민들께서 고통받지 않게 사시게 해 드리는 것이 목표인데 현실에서는 고통을 받고 계시는 국민들이 꽤 계십니다. 그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깊은 책임을 느끼고 몹시 가슴이 아픕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운열 의원** 오늘의 우리 경제가 당면한 문제

의 본질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한두 마디로 다시 한번 요약해 해 보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국민 전체로 보면 양극화·고령화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산업에만 국한해서 본다면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 서비스업의 부진, 신산업의 지체,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이것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최운열 의원**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미·중 무역 마찰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대외 요인이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운열 의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몇몇 경제정책에서 목표는 순수했지만 시장이 소화할 수 없는 정책으로 인한 후유증이 원인을 제공한 면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인정합니다. 실령 순수한 취지에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그 정책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현장에서 바로 그러한 정책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국민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까지를 감안하면서 정책이 훨씬 더 정교하고 세밀해야겠다 하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최운열 의원** 돌이켜 보면 지난 대선 때 4당 후보가 공히 공약한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도 지역별, 업종별 차등화 정책으로 보완하시고 근로시간 단축도 산업 특성을 살려서 탄력근무를 보다 전향적으로 확대하고, 연소득 1억 5000만 원 이상의 전문직 고임금 근로자들에게는 예외로 인정하는 유연성을 발휘한다면 훨씬 부작용 없이 정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이라도 보완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국무총리 이낙연** 최저임금에 관해서는 결정구조를 개편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개편안을 국회에도 제안했습니다.

○**최운열 의원**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될 것입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안 됩니다.

그리고 차등화를 말씀 주셨는데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31년 동안 성공하지 못한, 실현하지 못한 제도입니다. 막상 하려고 보면 굉장히 많은 과제가 있고 그래서요, 당장 차등화한다면 아마도 내리기보다는 어느 분야인가 올리는 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감당 가능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습니다.

탄력근로제는 경사노위에서 최종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이른바 노사정 합의는 이루어진 셈이니까요 그것을 바탕으로 입법화를 서두르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선택근로제라든가 하는 문제는 논의의 시간이 약간 더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운열 의원** 변호사라든지 공인회계사처럼 고연봉의 전문직 근로자들이 굳이 52시간을 지켜야 할까 이런 문제도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그 문제도 노동계가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어서요 조금 더 논의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운열 의원** 일부에서 제기하는 공급 위주의 과거 성장정책으로의 회귀는 우리 경제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자세로 정책의 유연성을 발휘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장의 실패가 예상될 때 정부의 개입은 필요합니다만 시장의 수용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정책 또한 실패로 귀결된다는 점을 정책 당국이 인식하셨으면 합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깊게 유념하겠습니다.

○**최운열 의원**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우리의 외교안보 라인이 백악관 외교안보 라인과 소통이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실상은 어떠신가요?

○**국무총리 이낙연** 그렇지 않아도 어제 야당의 원님으로부터, 의원님께서 구체적인 이름까지 거론하시면서 누구누구는 통화도 안 된다, 전화해도 전화를 받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답변드렸는데요, 확인해 본 결과 어제 통화도 했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통화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했습니다.

○**최운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지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감사합니다.

○**최운열 의원** 공정거래위원장 나오시지요.

해외 가서 강의 잘 하고 오셨어요?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예, 잘 다녀왔습니다.

○**최운열 의원** 정부가 선제적으로 그리고 보다 과감히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했다라면 기업이나 자영업자의 지급 여력이 보장됐을 거고 그 기

초 위에서 우리 정부의 각종 경제정책이 추진되었다면 부작용이 최소화되고 정책 효과는 극대화했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중에서 공정경제가 소득주도성장 및 혁신성장의 두 바퀴가 제대로 굴러가기 위한 제도적 인프라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 저희 공정위뿐만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이런 공정경제 또는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많은 정책적 노력을 해 왔고 현장에서는 비가역적인 변화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아직까지는 눈에 띄게 개선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정경제 또는 경제민주화의 시책이 좀 더 강도 있게 진행되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책의 목소리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마는 다만 공정경제나 경제민주화 정책은 경기가 좋다고 해서 과속하지도 않고, 경기가 나쁘다고 해서 후퇴하지도 않는 일관된 속도로 예측 가능하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 유의하면서 앞으로도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운열 의원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인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지금 발의되어 있는데 하루 빨리 통과되어야 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제가 지난주에 유럽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세계 경제정책 콘퍼런스에 다녀왔는데 거기에 모인 60개 나라의 경쟁 당국자들의 공통적인 공감대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레벨 플레이 필드(level playing field), 즉 평평한 운동장을 만드는 것이 혁신의 기초가 되고 21세기 경쟁 당국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사회 경제생활의 기초로서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업 차원에서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권익이 제대로 잘 보장이 되는 상법 측면에서의 개혁 노력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기업간의 거래관계 측면에서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

도록 해야 하는 그런 공정거래법 개정이 우리 경제 개혁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상법이나 공정거래법 개정이 또 기업 경영에 지나치게 부담을 주는 그런, 너무 빠른 속도로 가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내놓은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체계나 또는 학계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운열 의원 화면을 좀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양적 지표는 대단히 자랑스럽습니다만 기업의 경영투명성과 지배구조 수준을 나타내는 질적 지표는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137개국 중에서 기업 경영윤리의 수준 90위, 회계감사 수준 63위, 이사회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느냐 109위, 투자자 보호는 잘 되고 있느냐 99위입니다. 창피한 수준이지 않아요?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예.

○최운열 의원 나쁜 지배구조는 과도한 임원 보수, 극심한 로비, 기업의 불법행위, 불투명한 경영 그리고 정실주의를 초래한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이는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에서도 목도해 온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들 지표의 개선 없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은 어렵다고 판단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경제학계에서 흔히 쓰는 표현입니다마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는 크게 주주 자본주의 모델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델이 있다라고 대별합니다마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다보스포럼에서 매년 발표하는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한 여러 가지 평가지표들을 보면 주주 자본주의 모형이든 또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형이든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의 경우에는 예외 없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로 그런 질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앞선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기업들이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없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조속히 메워 가는 것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서 더욱더 성장하고 유지·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전제조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운열 의원 본 의원 생각은 질적 지표가 20위권 정도로 올라가지 않는 한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은 어렵다고 봅니다.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최운열 의원**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한 재계의 우려 사항을 알고 계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예, 열심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최운열 의원** 특히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에 별건수사에 대한 우려, 이것에 대한 보완책은 갖고 계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또 여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특히 기업 측면에서 전속고발권이 부분 폐지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려 사항, 특히 그중에서도 중복 수사·조사 부분이나 또는 별건수사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단순히 법조문을 바꾸는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 이하의 하위 규정들을 보다 분명하게 저희들이 제시함으로써 이런 재계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올해 들어와서 저희 공정위가 법무부와 함께 그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수사·조사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경성담합 중에서 입찰담합에 관해서만, 리니언시 자진 신고가 들어온 사건 중에서 입찰담합에 대해서만 검찰이 우선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공소시효가 1년 미만으로 남은 사건에 대해서만 검찰이 우선 수사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공정위가 먼저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영역을 구분했구요.

그다음에 검찰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강제수사를 통해서 입수하는 정보가 다른 어떤 영역으로 확산되는 이른바 별건수사 부분에 관해서는 법무부나 대검찰청에서 그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관리하고 일선 수사부서가 아니라 대검 차원에서 그것을 관리하면서 수사 단계마다 대검 측에 사전승인을 받아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을 지금 법무부와 대검 측에서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안을 통해서 예측가능성을 높이면서 재계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 재계를 비롯해서 저희들이 설명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남은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도 더욱더 소통 노력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우려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운열 의원** 예규나 시행령 같은 데에서라도 넣어 가지고 재계의 우려 사항을 없애 주셨으면 합니다.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법 밑에 있는 여러 가지 하위 규정들을 촘촘하게 마련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운열 의원** 일부에서는 경제도 어려운데 상법이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기업을 더욱 옥죄다고 주장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사실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런 방향으로 언론 보도가 너무 일방적으로 나오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법률들이 있습니다마는 예컨대 상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360만 개 기업 모두에게 적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경제법이고, 공정거래법은 그중에서 대기업 집단 시책이라고 부른다면 자산 5조 원 이상의 60개 그룹, 계열사 숫자로는 2000 개 기업한테 적용되는 법률이고,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7개 금융그룹에만 적용되는 법률인데 지금 사실 상정되어 있는 법률의 경우에는 이런 어떤 여러 법률들의 종합적인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조금 우려가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부가 법률안을 제안할 때 하나하나의 법률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경제법률들의 종합적인 도입 효과가 균형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안을 정비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상법이나 공정거래법이 이른바 기업의 활동을 규율하는 내용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컨대 공정거래법 같은 경우에는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기업들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등의 재계에서도 조속히 입법화되기를 바라는 내용들, 즉 21세기의 변화된 경제 환경의 변화된 내용들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의원님들과 그리고 언론이 좀 더 균형감 있게 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운열 의원**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고 기업을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시켜 주는 장치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최운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감사합니다.

○최운열 의원 부총리 나오시지요.

노동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4차 산업 혁명의 물결과 세계 시장의 경쟁환경 변화로 기존의 일자리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20세기 방식의 노동정책은 더 이상 통하지가 않습니다. 과감한 노동개혁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국내 기업 중에서 해외 경쟁기업과 비교해서 생산성은 낮는데 절대임금은 오히려 더 높은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들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생존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사실 기업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임금이 유일한 요소는 아닙니다만 제가 보기에 경쟁력을 갖춘 기업만이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운열 의원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도 경쟁력 없는 기업의 구조조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기업의 구조조정이라고 하면 인력 구조조정만을 생각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일자리입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고통을 분담하여 적정 수준까지 임금을 조정하여 실업을 최소화하는 임금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대표적 사례라고 봅니다.

한계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사후적 인력 구조조정보다 선제적 임금 구조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인력 구조조정 단계까지 가기 전에 기업이 노사 간의 상생에 의해서 다른 경쟁력 회복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계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운열 의원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실 수 있는데 한계가 있겠습니까만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주셨으면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예.

○최운열 의원 비정규직 문제도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입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사회 양극화와 만성적인 수요 부진 문제 역시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예,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사실 우리 경제가 장기 안정적으로 성장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완화가 굉장히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최운열 의원 부총리께서 기업의 CEO라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중 어떤 고용 방식을 택하시겠습니까?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일단 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맡는 직무의 성격하고 들어가는 투입 비용을 감안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운열 의원 정규직 비정규직을 한번 선택해보시라고요.

제가 회사의 사장이라면 지금 현재 우리 상태에서는 비정규직을 선호할 겁니다. 그러면 부총리가 구직자라면 어느 일자리를 원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당연히 정규직을 원할 것 같습니다.

○최운열 의원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동일노동 공정임금 체계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직무 분석이 철저하게 되어 있다면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중 누구의 월급이 더 많아야 되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제가 의원님 질문 취지를 감안한다면 비정규직이 아무래도 고용 불안이라든가 프린지 베니핏(fringe benefit) 측면에서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에게 더 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최운열 의원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high risk high return) 이론입니다.

이렇게만 되면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무조건적인 유리함이 사라지고 사용자가 무한정 비정규직을 늘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근로자와 구직자는 본인의 처지에 따라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중에서 선택할 것입니다. 그렇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예.

○최운열 의원 기간제법 등의 사례처럼 일률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보다 동일노동 공정임금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의원님, 지금 동일임금에 대한 공정임금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 경제 현실상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도 완벽하게 정착이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 주신 내용이 현실적으로 정착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단 동일임금에 대해서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원칙을 정착시켜 나가면서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운열 의원 그렇게 소극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북구에서는 이런 임금 체계가 지금 정착돼 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증권 쪽에서는 이미 이런 식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임금 구조조정과 공정임금 체계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최운열 의원 우리 홍 부총리 계실 때 정착되도록 한번 노력해 주십시오.

규제 개혁이 지지부진한 사이 기업들은 발목 잡는 규제를 피해 해외에서 대규모 신사업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네이버는 일본 자회사 라인에 7500억 원을 투자하고 카카오는 일본에 블록체인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왜 국내 최대 인터넷 기업들이 해외에서 이렇게 투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의원님, 제가 개별 기업의 해외 투자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규제 때문에 해외로 나간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최운열 의원 우리 규제의 개혁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 세계 각국은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을 유치하려 앞다투어 경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형 경제인데 일부 시민단체, 정치권은 아직도 개발도상국 시대의 건별 규제를 주장하고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기업이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선진국형 규제는 해서는 안 될 사항만 명시하고 다 푸는 포괄적 규제를 도입하되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우리도 규제 마인드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선진국처럼 원칙 중심 규제, 포괄주의 규제를 채택하되 어길 경우 강한 징벌적 손

해배상을 요구하는 체계로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의 경제 현실이 과거 정부 탓만도 아니고 현 정부 정책의 실수에 기인한 것만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 여당은 무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보다 겸허한 마음으로 경제 현실을 인식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당면한 구조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기업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를 타파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 여야에 규제 빅딜을 제안합니다.

야당이나 재계가 요구하는 서비스발전법을 포함한 규제 완화를 정부 여당이 대폭 수용하고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경쟁 풍토를 조성하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을 야당이 적극 수용하는 빅딜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창업을 통한 혁신성장의 꽃을 피워 국민들께 힘과 희망을 드립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문희상** 최운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북 충주 출신의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한민국 중심고를 충주 출신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선장의 운항 미숙으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정치 보복, 탈원전, 4대강 보 철거 등 사회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민생경제는 지금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의 효

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장밋빛 희망만을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럴지 의문이 듭니다. 국민들께서도 궁금해합니다. 국민을 대신하여 따져 보겠습니다.

국무총리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시작부터 최저임금 과속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을 거의 맹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총리님, 소득주도성장을 왜 하는 겁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기존의 기업 중심의 성장이 줄 것으로 기대했던 이른바 낙수효과가 기대만큼 나오지 않고 그대로 가 가지고는 소득불평등의 심화 등등으로 성장력마저 갉아먹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소득주도성장을 하나의 종합 정책으로 내놓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종배 의원 소득주도성장의 개념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소득주도성장은 세 가지의 기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가계의 소득을 늘려 드리는 것이고요. 그중에는 최저임금 인상도 포함이 됩니다.

둘째는 가계지출을 줄여 드리는 것. 건강 보장성 강화를 통해서 의료비를 경감해 드린다는가 하는 것이 하나의 예겠습니다.

세 번째가 사회안전망의 확충. 그래서 불행하게 실업이 된다는가 또는 소득이 급격히 떨어진다는가 했을 적에 안전망을 갖춰서 그런 급격한 불행을 완화해 드리는 이런 세 가지의 기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배 의원 결국 소득주도성장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좀 높여서 소득 양극화를 줄여 보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것이 중요한 것 중의 하나입니다.

○이종배 의원 그래서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인상했는데 과연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났습니까? 또 빈부 격차가 줄어들었습니까? 소비가 늘고 이로 인해서 생산과 투자가 늘어났습니까? 일자리가 늘어났습니까? 경제가 살아났습니까? 결과는 아닙니다.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은 경제 난국을 타개하는 정책이 아니라 국민을 이분법적으로 나눠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강제로 소득을 이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이라기보다는 이념이라고 보는 겁니다. 교과서에도 없는 한국형 이념 정책을 만들어서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 겁니다.

총리님,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인상해 놓고 저불능력이 없으면 사업하지 말라고 몰아붙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영세 사업주는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 알바 등 취약계층 근로자를 해고하게 되고 저소득층은 일자리를 잃게 되고 소득 양극화는 커질 것이라는 생각은 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최저임금 인상에는 명암이 있습니다. 흔히들 신문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도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만 최저임금을 받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달리 보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은 임금 근로자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임금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폭이 늘었습니다. 또 임금 근로자 간의 임금 격차가 완화되었습니다. 저임금 근로자의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저임금도 내기가 어려운 소상공인들께는 큰 경영 부담을 드렸고 그로 인해서 그런 일자리마저 잃게 되신 분들이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뼈아프게 생각하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종배 의원 총리님,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 주기 위해서는 자영업자·소상공인·농어민들의 소득도 최저임금에 준해서 높여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방청석에 제 지역구 소상공인들이와 계십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바로 그런 문제를 완화해 드리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과 근로장려세제(EITC) 등을 통해서 소상공인들 또는 일을 하지만 여전히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을 도와 드리고 있고요. 농민들의 경우에는 직불제를 포함한 많은 보조금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고통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저희들도 깊게 인식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배 의원 최저임금이 급격히, 2년간에 29% 올랐지요. 이분들한테도 뭘 해 줘야, 이렇게 소득을 올려 줘야 소비가 창출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은 오히려 임금을 줘야 되는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워하신다는 것을 감안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바로 그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종배 의원 미봉책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이분들은 지금 당장 폐업을 해서

심폐소생을 해야 되는데 진통제 가지고는 미흡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지난주에 제가 소상공인연합회 지도자들 모시고 충분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분들의 절절한 말씀을 제가 잘 듣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배 의원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이종배 의원 한 번 더 들어 보시지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국민들 목소리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달 23일, 25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보시지요.

이처럼 국민들은 소득주도성장에 절규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소득절망성장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4분기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악의 양극화를 기록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배 의원 지난 1월 실업자 수가 122만 4000명에 달해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월 실업자 수는 더 늘어서 130만 3000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주도하던 제조업 취업자 그리고 경제활동 주축 세대인 삼사십대 취업자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이종배 의원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경기동행지수·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8개월 연속 동반 하락했습니다.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장 기록입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이종배 의원 그야말로 경포대 시즌 2가 시작됐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시즌 1보다 더 블록버스터급입니다. 각종 관련 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역대 최악·최저·최대란 수식어가 어김없이 따라붙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경제 마이너스의 손이 아니라 경제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 망치기, 최악의 경제 성적표로 기네스북에 등재해도 되겠습니다.

총리님, 어떻습니까? 한번 소신껏 말씀해 보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지금 주신 말씀, 정확한 통계입니다. 그 통계의 이면을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령화를 포함한 인구 구

조의 변화라는 요인을 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은 분배 구조 악화에는 1분위(최하위 소득 20%) 계층의 고통이 깔려 있습니다만 그 1분위의 절반가량이 70대 이상의 노인들입니다. 고령화가 우리 경제와 사회에 심각한 그림자를 던지고 있다는 뜻이 될 거고요.

아까 삼사십대 고용 상황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삼사십대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고용 상태가 만족스럽다는 뜻은 추후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인구 구조의 변화를 빼고 말하는 것은 현실을 정확히 보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삼사십대 남자의 경우에는 고용률이 90% 됩니다. 그런 것도 감안하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최악이라고 여러 가지 ‘최’ 자를 많이 붙이셨는데요, 국가 신용등급은 사상 최고로 올랐고요. 외환보유액, 사상 최다로 올랐고요. 국가 부도 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로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성장률, 내년에는 OECD 중에서 1위가 될 것이라는 OECD의 전망도 있습니다만 내년은 가 봐야 알겠습니다. 아, 금년 얘기지요. 작년의 경우에는 미국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령 거시지표들 가운데 낙관적인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그 그늘에서 고통당하는 국민의 그 어려움에 대해서는 정부가 외면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배 의원 총리님 너무 낙관적인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그렇지는 않았고요……

○이종배 의원 인구구조가 과거에는 그렇게 안 흘러 왔던 것도 아니고 계속 흘러 왔던 거고, 인구구조의 영향도 물론 있겠지만 너무 낙관해서는 안 되고.

외환보유액이라든지 신용등급, 부도율 또 성장률 이걸 과거부터 죽 이어 온 겁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러니까요……

○이종배 의원 지금 정부에서 꼭 이루어졌던 건 아니고……

○국무총리 이낙연 아니, ‘최’ 자니까요……

○이종배 의원 총리님, 성장률도 무디스에서는 금년도에 2.1%밖에 안 보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러니까요.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것도 과거부터의 축적이 있었던 것이고요, 나쁜 것도 그러했지요. 저희

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종배 의원** 총리님, 과거에는 소득주도성장이 이렇게 안 했잖아요. 최저임금 이렇게 급격하게 과속 인상 안 했잖아요.

○**국무총리 이낙연**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한국 경제의 많은 문제가 축적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그렇다고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종배 의원** 어쨌든 총리님, 경제 현실이 이런데도 문재인 대통령과 경제참모들은 너무 낙관적으로, 또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한번 화면 보시지요.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효과가 90%다’, ‘경제지표가 좋아지고 있다’, 또 옛 그제는 ‘국가 경제는 견실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들으셨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옛그저께 말씀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좋은 것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제조업의 약화라든가 또 고용과 분배의 어려움, 충분히 지적하시고 저희들께 꾸지람을 주셨습니다.

○**이종배 의원** 또 소득주도성장을 설계한 장하성 전 청와대 경제실장은 재작년 10월 ‘내년 경제성장세를 이어 갈 것’이라고 하더니 작년 11월에는 ‘내년에는 소득주도성장 성과를 체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반복 하더니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국민들이 한두 번 속은 게 아닙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경제가 나아질 거라고 국민들께 거짓말할 겁니까?

무신불립, 아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이종배 의원** 거짓말이 반복되면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게 됩니다. 대통령과 경제참모들은 양치기 소년이 될 겁니까?

총리님, 경제가 지금 좋습니다. 도대체 경제가 언제 좋아집니까? 소득주도성장 성과는 언제 나타납니까? 언제까지 국민들께 기다려 달라고만 하실 겁니까? 말씀해 보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경제에는 명과 암이 있습니다. 명은 더 살리고 암은 줄이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경제가 더 좋아지도록 정부가 더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종배 의원** 총리님,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 소득주도성장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소득주

도성장을 포기한 겁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종배 의원**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정권만을 위한 정부, 그런 정권으로 역사에 남으시겠습니까?

OECD, 무디스, 경제학회에서도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을 옹호하는 전문가는 거의 없습니다. 국민들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려면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해야 됩니다. 최저임금을 당분간 동결하고 최저임금, 주휴수당, 근로시간 단축을 업종별·규모별·지역별로 구분 적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보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인용하신 한국경제학회 세미나에서는 두 분의 의원님이 소득주도성장을 비판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다른 의견을 말씀하신 분도 계신 것으로 보다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소득주도성장에는 의료비 경감이라든가 가계비 지출의 감소, 사회안전망 확충 등도 있습니다. 그것을 포기해서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는 유지하고 더 키워 가되 세밀하지 못해서 생긴 부작용은 줄여 가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종배 의원** 총리님, 사회안전망 구축은 종전에도 해 왔고 복지는 계속 늘려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건강 보장성 강화라든가 하는 것은 획기적으로 늘렸던 것이고요, 그런 식이라면 최저임금도 계속 올라 왔지요. 올랐는데 좀 더 많이 올렸느냐, 적게 올렸느냐의 문제인데요 의료비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겠지요.

○**이종배 의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같은 것도 재정능력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것 감안해서 추진하고 있고 더욱더 세밀하게 잘 보겠습니다.

○**이종배 의원** 계속해서 질문 이어 가겠습니다.

에너지정책은 국가 경제, 국민 생활, 환경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합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이종배 의원** 그렇다면 국민적 동의 없이 탈원

전을 강행해도 되는 겁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탈원전이라는 용어는 부적절한 용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60년에 걸쳐서 원전의 의존도를 줄여 가자는 정책이고요 세계의 추세에 맞춰서 그만큼을 신·재생에너지로 채워 나가자 하는 정책입니다.

○이종배 의원 ‘탈원전’ 용어를 대통령께서 쓰시고……

○국무총리 이낙연 선거 때 썼지요. 선거 때는 조금 과장된 언어를 쓰기도……

○이종배 의원 그리고 60년 후에는 왜 없애는 겁니까? 그걸 왜 없애야 됩니까? 5년짜리 정부가 60년 정책까지 결정합니까? 국민적 동의도 받지 않고 그렇게 결정해도 되는 겁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원전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나라이고 우리 국내 동남권, 어제 지진과 관련된 문제도 발표가 됐습니다만 지진이 많이 나는 지역에 하필이면 원전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그런 원전 의존도는 단계적으로 낮춰 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7년 대선에서 주요 후보 다섯 분 가운데 네 분이 탈원전을 공약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얻은 득표율을 보면 75%에 해당됩니다.

○이종배 의원 총리님, 탈원전을 하더라도 국민적 동의를 얻어서 법적 절차를 따져야지요. 이것은 법적 절차도 어긋나고 국민적 동의도 없고 내용도 잘못된 겁니다. 이 탈원전은 법적으로 봐서 무효입니다. 법적 절차를 무시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에 의한 에너지 쿠데타고 정책의 탈을 쓴 대국민 테러입니다.

탈원전 취소하십시오. 그리고 신한울 3·4호기 즉각 재개해야 됩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우선은 국민께 약속을 드리고 투표로 뽑힌 대통령의 정책입니다. 그리고 그 정책에 관해서는 공론화위원회를 거쳐서 신고리 5·6호기는 공사를 재개하되 다른 원전은 건설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국민의 의사를 받았습니다.

○이종배 의원 시간이 없어서 길게 얘기 못 하는데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탈원전 국민 반대서명 43만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답변 안 하고 있는데 답변하도록 건의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일정한 조건이 되면 답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원전 의존도의 단계적 완화에 찬성하시는 국민도 매우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종배 의원 총리님, 이번 개각에서 충청도 출신 한 명도 없는 것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에 대해서 일부러 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종배 의원 과거부터 인사 때는 그런 것을 고려를 했지요. 반도체도 이번에 안 들어오고 또 충청도의 보 철거 이런 것을 충청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충청도 홀대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보의 철거도 이번에 마침 금강과 영산강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겁니다. 한강, 낙동강도 있고 하나까요 특별히 충청도만 어쩐다 하는 것은 꼭 정확한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물관리위원회의 결정이라는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충분히 지역의 형편도 감안해 가면서 특히 농업용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배 의원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무총리 이낙연 감사합니다.

○이종배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희상 이종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중구 성동을 출신의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욱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문희상 의장님, 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수도의 서울 심장 중구와 성동구의 옥수동, 금호동을 지역구로 둔 바른미래당 지상욱입니다.

요즘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대는 꿈이 없고 20대는 답이 없고 30대는 집이 없고 40대는 내가 없고 50대는 일이 없고 60대 이후에는 낙이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있다, 된다가 아닙니다. 없다,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실체를 이만큼 통렬하게 비판하는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총리님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이종배 의원님 질문에 2017년 대선 때 탈원전 공약 대선후보가 네 분 하셨다고 하셨

습니다. 어떤 분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홍준표 대표를 빼고는 다 하셨습니다.

○지상욱 의원 잘못 알고 계십니다. 바른정당의 대선후보였던 유승민 후보도 탈원전 공약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원전 의존도의 완화를 말씀 하셨습니다.

○지상욱 의원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지상욱 의원 총리께서는 10대에 어떤 꿈을 꾸 셧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꿈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웃음소리)

○지상욱 의원 그 왔다 갔다 한 꿈을 다 이루 셧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상욱 의원 우리나라 10대 청소년은 성적지 상주의 입시제도에 너무 과도한 학업스트레스에 빠져 있습니다. 경제는 이렇게 어려운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학생들 1인당 사교육비는 역대 최대 입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우선은 대학입시 정책이 작 년에 불확실한 상태가 몇 개월간 계속된 일이 있 었습니다. 그것이 작용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일부 교육청에서 야간자 율학습을 폐지했습니다. 야간자율학습을 폐지하 면 아이들이 더 발달하고 창의적으로 자랄 것으 로 기대했는데 그것이 잘못하면 사교육의 시간만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아이를 적 게 낳을수록 아이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는 그런 영향도 있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지상욱 의원 다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요, 가 장 중요한 것은 교육부장관조차도 위장전입을 서 습지 않는 대입 만능주의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번의 선택으로 평생 직업의 선택권과 지위가 결정되는 그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 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지상욱 의원 지금 희망을 키우기보다는 절망 에 적응하게 만드는 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라고 국민들은 아우성이 높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

니다.

20대는 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일하고 싶어도 뽑아 주지 않는 세상입니다. 혹시 ‘문송합니다’ 이런 말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짐작이 갑니다.

○지상욱 의원 원래는 ‘문과여서 죄송합니다’ 하 는 자조적인 말이었는데요, 요새는 젊은이들이 ‘문재인 대통령 뽑아서 죄송합니다’라는 말로 변 했답니다. 총리께서 책임을 좀 통감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깊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상욱 의원 대부분의 일자리는 중소기업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공무원 일자리 만들겠다는 그 예산, 그 돈 모아서 중소기업·스타트업 육성에 투자했으면 매우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 이후 최고의 체감실업률을 지금 사랑하 고 있습니다. 지난해 일자리 늘리라고 준 예산을 기업은 자동화 설비에 쓰고 고용된 사람을 자르 는 데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도 이런 예산 또 허공에 대고 막 뿌리면서 사용하실 겁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산이 좀 더 본래 취지에 맞게 집행되도록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지상욱 의원 제발 왜곡된 데이터 신봉 마시고 직접 총리께서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0대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살 곳 마 련이 어렵습니다.

총리께서는 사회생활 몇 년 만에 집을 장만하 셧습니까?

(문희상 의장, 주승용 부의장과 사회교대)

○국무총리 이낙연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이사를 다녔습니다. 기억도 못 하겠는데요, 맨 처음 살았 던 곳은 봉천동의 어느 단독주택 2층에 세 들어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30대 후반 쯤에 제 집 을 가졌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상욱 의원 3만 불 시대에 지금 청년들은 도 대체 얼마나 벌고 몇 년이나 걸리면 집을 살 수 있겠습니까? 총리님 집 사셨을 때하고 지금 상황 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답변 주실 수 있겠 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더 어려워졌다는 것을 잘 알 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야당 국회의원 할 때 나 기자 할 때나 즐겁게, 즐겁게가 아니라 자주 했던 얘기가 무슨 월급쟁이 몇 년이 걸려야 집을 갖는다 이런 식의 통계를 많이 썼고 또 발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상욱 의원** 사회 초년생은 신용도 부족하고 대출도 어렵습니다. 집은 살아가는 곳인데 이제는 사고과는 곳이 꽤 버렸습니다. 집값 잡는다고 오히려 집값만 올려놨습니다. 그 와중에도 고위직들은 쏠쏠하게 재미까지 봤습니다.

자, 30대 실수요자가 청약제도를 통해서 집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답변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만만치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상욱 의원** 특히 100% 가점제, 그게 도입된 이후로 1인 가구, 신혼부부들은 오히려 역차별 받아서 더 어려워졌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정책의 실행 과정에서 취지와 다른 결과가 나오는 일이 왕왕 있습니다.

○**지상욱 의원** 잘 들여다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그런 일은 좀 더 정교하게 보겠습니다.

○**지상욱 의원** 40대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40대는 내가 없다'입니다. 40대 취업자 수가 28년 만에 가장 크게 감소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감소의 영향도 있을 거고요. 40대 남자는 취업률이, 고용률이 92%쯤 될 겁니다.

○**지상욱 의원** 지금 40대들이 20대 때는 IMF 경제위기로 또 20년 후인 지금은 구조조정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완전히 버림받은 세대라고 자조합니다. 40대 빈곤율 이렇게 상승하는 이유, 조금 전에 말씀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일자리도 없는데 돈만 먹고 자란 자녀들이라고 요새 자조적인 얘기를 합니다. 양육해야 됩니다. 집 마련하고 유지해야 됩니다. 부담이 힘듭니다. 거기다가 10대, 20대, 30대에 누적된 그런 채무가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저희가 주거복지정책에 각별히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그에 관한 상세한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빨리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특히 청년이나 중년들이 집 문제 때문에 좌절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상욱 의원** 도와주십시오.

세대별로 고통받는 문제인 대통령 효과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50대는 일이 없습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했는데, 이제 반밖에 살지 않았는데 직장에서 퇴출당합니다. 내 자신을 챙기기도 어

려운데 독립하지 못한 자녀들 챙겨야 되고 부모님까지 모셔야 됩니다.

지난해 50대 가처분소득이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쓸 수 있는 돈이 없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우선은 좋은 일자리를 갖지 못한 분들이 계실 것이고요. 그게 제일 큰 이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50대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상욱 의원** 도대체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는 어디 있는 겁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의료비가 많이 경감이 됐고요. 사회안 전망은 확충 과정에 있고 임금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득이 올라간다는가 임금 격차가 완화된다는가 저임금 근로자의 숫자가 줄어든다는가 하는 긍정적인 성과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고용시장에서 배제되신 분들 또는 그 최저임금을 지불할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크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상욱 의원** 예,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조기 은퇴해서 별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가족을 부양해야 됩니다. 금리가 올라서 이자 더 내야지, 공시가를 급격하게 올리니까 세금 더 내야지, 거기에 따른 보험·연금 지출도 많아집니다. 복지급여를 못 받게 되는 일까지 생기게 됩니다. 은퇴 후 달랑 집 한 채 가지고 어렵게 사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지상욱 의원** 이분들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왜 정부에서 공시가 기준을 못 밝히냐? 답변 좀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제가 세세한 걸 알지 못합니다. 조금 이따 국토부 장관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마는 큰 원칙으로 보면 시세가 많이, 가격이 많이 오른 그런 주택들 또는 시세 반영률이 낮은 현실과 거리가 많은 그런 주택들에 조금 더 많이 공시지가를 올렸고요. 그렇지 않은 쪽은 그렇게 많이 올린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공시지가 현실화가 그분들의 생활 또는 복지 수급, 복지 혜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세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상욱 의원** 그런데 같은 집, 어떤 분들은 더 좋은 집이 더 싼 세금을 내고 더 낮은 가치를 가

진 집의 공시가가 더 올라서 세금을 더 많이 낸다고 불평이 많습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 기준을 궁금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것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지상욱 의원** 영업기밀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일부러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지상욱 의원** 기준을 알아야 그분들도 미래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기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외우고 있지 못할 뿐입니다.

○**지상욱 의원** 그러면서도 분양 원가는 공개하라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케를 같이하고 있는 정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거듭 말씀드리지만 뭐가 있는데 일부러 덮고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지상욱 의원** 알겠습니다. 총리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한전 사장이 전기요금 인상이 절실하다고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런 말을 한 걸로 기억합니다.

○**지상욱 의원** 전기요금 인상하실 겁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몇 번 말씀드렸지만 현재의 에너지 정책 그대로 가더라도 2022년까지는 상승요인이 거의 없다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고 에너지 수급정책을 통해서 그걸 밝힌 바가 있습니다.

○**지상욱 의원** 상승시키지 않으면, 인상시키지 않으면 한전은 파산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안 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건 좀 더 세밀하게 보겠습니다마는 다행히 올해 들어서 한전의 수지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상욱 의원** 이 정부가 끝날 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앓아간 세금을 정권 기반 유지를 위해서 쓰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상욱 의원** 예를 들면 세금을 올리지 않습니까? 공시가를 올려서 세금을 많이 걷고 보유세를

많이 걷고 지금 세수를 많이 늘려 가는데 그게 국민들한테, 삶에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타 면제 같은 사업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혹시, 당연히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이미 예타에서 떨어진 5조 3000억의 남부내륙철도, 이거 문제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지사 1호 공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우선은요 세금으로 이루어진 게 예산인데요, 예산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이 복지 예산입니다. 12.4%가 올랐을 겁니다. 그 복지 예산은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들에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정권 기반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들으면 몹시 서운할 거라 생각하고요.

예타 면제는 각 지역들이 예타제도라는 장벽 때문에 오랜 숙원으로 갖고 있었지만 이루지 못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사업을 한 거고요. 그 예타 면제 사업 전체를 10년 동안 추진한다고 했을 때 해마다 1.9조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지상욱 의원** 이 사업은 예전 지사 때 예타 평가에서 떨어진 사업입니다. 그리고 선제적으로 하거든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타 면제 사업들이 대체로 그렇습니다. 예타제도의 벽에 막혔던 사업들이지요.

○**지상욱 의원** 예타를 통과한 사업들도 부실화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꼭 참고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지상욱 의원** 나중에 문제인 정부의 당백전 발행이라는 그런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총리께서 60대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지상욱 의원** 60대에 가장 자살률이 높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지상욱 의원** 소위 말하는 60대를 위한 지금 정부의 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60대는 정년이 끼어 있는 세대이고요 일자리에서 벗어나는 세대입니다만 말씀드리면 좀 겁니다. 경제적 고통, 사회적 고통,

신체적 고통, 고독이라고 하는 정서적 고통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세대지요. 그 세대에 맞는 정책들이 그 고통에 맞게 다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한꺼번에 말씀드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요컨대 경제적 고통에 부응해서는 노인 일자리나 기초연금의 인상 같은 것이 있을 거고요. 사회적 고통, 역할이 없어지는 것은 바로 일자리 또는 자원봉사건 또는 다른 역할을 드리는 것, 아까 신체적 고통은 각종 의료제도가 있을 거고요. 고독이라는 문제…… 저는 한국의 노인당·마을회관 제도가 굉장히 잘돼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많이 도움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지상욱 의원** 혹시 노인 일자리는 6070 초단기 알바 40만 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것만은 아닙니다만 실제로 현장에 가 보면 노인들께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노인 일자리야말로 공공부문이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상욱 의원** 국민들이 볼 때 성과를 부풀리기 위한 분식회계로 보이지 않도록 애를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국무총리 이낙연** 노인들께는 그것도 절박한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상욱 의원**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어서 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손을 잡아 주는 그런 경제사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정부는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분들은 가난한 분대로 모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총리께서 꼭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유념하겠습니다.

○**지상욱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저희를 키우셨던 그 어려웠던 시절에는 10대에 꿈을 키웠고 20대에 답을 찾았으며 30대에는 작더라도 내 집을 마련했습니다. 40대에 내 자신을 발견했고 50대에는 가장 활발하게 일을 했으며 60대 이후에는 내가 키운 자식들로부터 봉양을 받으면서 여생을 보냈습니다.

지금 정부는 국민이 죽고 사는 문제인 안보에는 정직하지 않고 국민이 먹고사는 경제에는 무능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큰 기대를 했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경이로울 것이라는 그 슬로건은 만든 당사자 김대호 소장이 과연 뭐라고 했습니까? 소득주도성장은 허구다라고 실토했습니다.

이제 집권 3년 차입니다. 계속 과거 정권만 타하면서 국민을 편 가르기 하는 것은 본인들의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으로 국민을 하나로 모아서 위기를 극복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솔직히 인정하고 고쳐 가면서 국민 통합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국민을 위한 진정한 용기이자 우리가 바로 지금 이곳 국회 본회의장에 함께 모여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주승용** 지상욱 의원님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성북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주승용 부의장님,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국회의원 유승희입니다.

여당 원내대표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호소했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 그리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명색이 제1야당 원내대표는 아무런 대안 제시도 없이 냉전 시대의 낡은 프레임과 노이즈 마케팅으로 국회의 품격을 땅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막말 공세로 일관한 제1야당 원내대표의 연설은 정말 위스트였습니다. 반면 진지한 정책으로 일관한 여당 원내대표의 연설은 베스트였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리님 나오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님, 어제 조선일보의 근로장려금 급증이 최저임금 때문이고 국세감면액이 10년 만에 한도를 초과했다는 기사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유승희 의원** 근로장려금 급증이 최저임금 때문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근로장려금이 작년 예산 심의 때 증액된 것은 사실이고요.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일자리 안정자금에만 너무 의지하지 말고 근로장려금(EITC)을 확대하라고 한결같이 권유해 주신 결과로 EITC를 좀 더 늘렸었습니다.

○**유승희 의원** 저는 근로장려금(EITC)이 열심히 일을 해도 가구당 소득이 적은 서민을 지원하는 소중한 사회안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맞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일을 해도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낸 세금을 돌려 드리는 좋은 제도입니다.

○**유승희 의원** 둘째, 팩트 체크 해야 되겠습니다.

EITC가 국세감면액 초과의 원인인 것처럼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맞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 전년에 비해서 증액이 된 건 사실이니까요. 그러나 그 감면액의 대폭적인 확대의 한 부분인 건 틀림없는데 가장 큰 비중이었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유승희 의원** 근로소득의 경우에 각종 공제에 따른 조세감면액이 60조 원이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유승희 의원** 그런데 근로소득 조세감면액이 60조인데 상위 10%가 받는 혜택이 거의 20조에 달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크게 확대된 올해 근로장려금은 4조 9000억 원입니다. 소득 상위 10%의 조세감면 20조 원은 문제가 없고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근로장려금 4조 9000억 원 이게 국세감면 법정한도 초과의 원인으로 보도하는 것, 맞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이른바 고소득층의 기준을 어디까지 봐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조세감면의 액수를 굳이 나누자면 고소득층이 약 30%, 저소득층이 약 70%의 감면 혜택을 봅니다.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감면 혜택인데 소득이 높기 때문에 감면 액수도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라든가 매출세액공제 같은 것은 아무래도 고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고소득층에 대한 조세 감면은 줄여 가는 과정에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승희 의원** 조세감면 60조 중 상위 10%가 20조를 가져갑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3 대 7 정도.

○**유승희 의원** 예, 그렇습니다.

지난 2월에 제가 지역구에서 동별로 열린 차례 의정보고회를 했는데 매회 백오십 분 정도에서 이백 분 정도, 연인원 한 천팔백 분이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주민분들께 근로장려금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아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했더니 고작 네 분 내지 다섯 분밖에 손을 안 들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지난 국감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했는데 근로장려금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국세청만으로는 홍보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비공식 부문의 근로자들은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 단위의 통장님들께 특수수당을, 특별수당이라도 드려서 이 홍보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자체 최일선 행정조직까지 망을 형성해서 그걸 알려 드리도록 하겠고요. 복지 시책을 포함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경우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승희 의원** 총리님께서 500만 순수 일용직 근로자의 연평균 소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500만?

○**유승희 의원** 예.

순수 일용직 근로자 968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이 안 됩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굉장히 열악합니다.

○**유승희 의원** 이 중의 절반은 300만 원 이하입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연소득이 그렇지요?

○**유승희 의원** 예, 반면에 소득 상위 0.1%, 2만 명 정도 되는데요 연평균 소득이 15억입니다. 소득 상위 1%, 22만 명 연평균 소득은 4억 원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금융자산 불로소득이 총 136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상위 10%가 이 중에서 무려 90%를 가져갑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4분기에 하위 20%의 소득이 전년도에 비해서 18% 감소했고 상위 20%의 소득은 10%가 증가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 통계청 발표를 보고 총리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

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굉장히 뼈아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위 20%의 절반 가까이 70대 이상의 노인들입니다. 고령화가 한꺼번에 덮쳐서 분배구조의 악화를 더욱더 재촉하고 있는 이 현실을, 이런 흐름을 어떻게 더 완화할 것인가 심각한 정책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유승희 의원** 총리님,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소득격차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유승희 의원**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선 저소득층에 일자리 제공 또 소득의 보전, 사회안전망의 확충, 크게 보면 그런 것들이겠습니다. 저소득층의 고용·주거·의료, 여러 방면에 걸쳐서 도움이 촘촘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승희 의원** 우리나라 사회복지 지출이 약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사회복지 예산이 약……

○**유승희 의원** 190조입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40% 조금……

○**유승희 의원** OECD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유승희 의원**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사회안전망을 더더욱 강화해야 되겠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유승희 의원** 그런데 제1 야당이 말끝마다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흑세무민하고 있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발 공부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리님, OECD 절반에 불과한 복지 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좌파 포퓰리즘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이낙연** 그런 용어를 너무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유승희 의원** 총리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사회복지 지출을 2배로 확대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이낙연** 여러 가지를 감안할 게 있을 겁니다. 감당 능력이라든가 또는 국민적인 동의도 필요할 것이고요. 또 얼마만큼의 시간을 들여서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텐데 그러

나 우리 고령화나 빈곤화 속도에 비하면 마냥 늦출 수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승희 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돈이 필요하지요, 재원이 필요하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유승희 의원** 저는 더 이상 부자 증세를 외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부유세 논쟁이 뜨겁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대선 후보들마저도 몇분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유승희 의원** 미국에서 ‘소득세 최고세율을 70%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하원의원이 있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차기 대선 주자인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이라든지 그리고 유명한 버니 샌더스 같은 경우에는 부유세 도입 그리고 상속세 강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서는 미국에서조차도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부유세 논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고려 요소가 꽤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의 그런 정의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외국의 사례를 보면 도입하려다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도입을 하고 있는 나라도 있긴 있습니다만 우리가 재작년에 최고 소득세율을 42%로 올렸습니다. 그것이 불과 1, 2년 전이기 때문이에요,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유승희 의원** 미국에서 소득세 최고세율이 90%를 넘은 적도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유승희 의원** 놀랍게도 우리나라도 1974년도 박정희 정부하에서 종합소득세를 본격적으로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최고세율이 70%였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오늘날 선진국 소득 불평등의 원인이 1980년도 이후에 최고세율 인하 등의 감세정책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적정 최고세율이 70% 내지 80%다 이렇게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미국에서……

○**유승희 의원** 이것이 그냥 정의감의 발로일까요?

○**국무총리 이낙연**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부자

감세 때문에 빈부 격차가 심해졌다는 연구는 무수히 나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단 우리의 경우에 지금 OECD의 평균 정도 되는 최고 소득세율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더 올릴 것이냐의 여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승희 의원** 우리나라 국민 여론상 부유세 도입에 대해서 몇 %가 찬성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분이 좀 더 많을 것이다……

○**유승희 의원** 슈퍼 리치에 대해서 도입하는 것을 67% 정도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에 최근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고 있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상화의 길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융자산의 경우에 제대로 된 과세를 못 하고 있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여러 가지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유승희 의원** 주식양도세는 현재 납세 인원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유승희 의원** 고작 1만 명밖에 안 됩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유승희 의원** 증권거래세 인하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정부의 발표가 나왔는데 주식양도세 전면 과세, 배당·이자 과세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주신 증권거래세와 양도세를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가 한꺼번에 검토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승희 의원**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해 두 차례나 배당, 이자 등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내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듣고 알 것 같습니다.

○**유승희 의원**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최고세율 70% 인상 그리고 상위 1%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부유세 도입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답변해 보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사회적인 양해랄까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중히 생각하겠습니다.

○**유승희 의원** 총리님께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답변하셨다고 보고요.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총리님께서 더 진지하게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유승희 의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감사합니다.

○**유승희 의원** 감사합니다.

부총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난 4분기에 하위 20%의 소득이 전년도에 비해서 18% 감소했고 상위 20% 소득이 10% 증가했다 그런 통계청 발표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총리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위 20% 중에 70세 이상 노인이 몇 %인지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55%로 알고 있습니다. 절반이 넘습니다.

○**유승희 의원** 65세 이상까지 합치면 55%예요. 절반이 넘습니다.

심각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예.

○**유승희 의원**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입니다.

이런 어르신들이 연명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기초연금뿐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유승희 의원** 우리 산업화를 위해서 희생한 노인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대접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부총리님 생각은 어떠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그렇지 않아도 정부가 기초연급에 대해서는 그래서 예전에 20만 원부터 꾸준히 인상시켜 왔고요. 올해도 하위 20%에 대해서는 25만 원으로 4월부터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승희 의원** 올해 기초연금 전체 예산이 얼마

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올해는 한 11조 50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유승희 의원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유승희 의원 계획을 이야기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2021년에 25만 원을 30만 원으로 올리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심각성을 감안해서 저희가 금년 4월 달에 하위 20%에 대해서는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내년 4월에는 하위 40% 그리고 21년 4월에는 하위 70%의 전 어르신들께 30만 원으로 올려 드릴 계획으로 계획을 당겨서 지급하고자 합니다.

○유승희 의원 부총리님, 더 당겨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당기면 당연히 더 낫겠지만 정부로서는 소요되는 재원이라든가 여타 노후보장체계와의 균형성도 같이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지금으로서 정부는 정부가 이렇게 앞당긴 지금 스케줄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추가적인 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면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승희 의원 올해 하반기부터 당장에 기초연금을 받는 모든 어르신들께 월 30만 원씩 지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그렇게 될 경우에 저희가 돈을, 소요를 빼 보니까 너무 소요가 커서 재원적으로 뒷받침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측면이 같이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유승희 의원 75세 이상 노인에게는 가능하면 차등적으로 10만 원을 더 지급해서 40만 원씩 지급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특히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주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 어르신들께 더 많은 기초연금을 드려서 노후보장체계를 탄탄하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40만 원까지 올릴 경우에 당장 제가

보기에 한 5조 정도가 더 추가적으로 소요가 되고요. 앞으로 5년간 소요를 저희가 추계해 보니까 한 20조가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정부로서는 이와 같은 재원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초연금에 대해서 당장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지를 저희가 짚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서요, 의원님의 올려줘야 한다는 그런 취지는 정부로서 충분히 동감하면서 같이 검토를 좀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 의원 하반기부터 당장 기초연금 받는 모든 어르신들, 70%지요, 30만 원씩 지급하게 되면 얼마가 더 재정이 소요가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저희가 한 3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빼지는 않았습시다.

○유승희 의원 얼마 전에 IMF가 경기 부양을 권고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유승희 의원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IMF 조사단이 지난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약 한 20일 정도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도 귀국하기 전날 만나 봤는데 전체적으로 그분들 지적은 한국 경제의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일단 펀더멘털이 좀 탄탄하다는 일차적인 평가는 내려 주었습니다. 다만 최근의 경기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역풍을 맞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정부가 의욕적으로 타깃팅하고 있는 성장률 2.6%를 달성하려면 정부의 재정보강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추경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저희에게 한 바가 있습니다.

○유승희 의원 어느 정도 규모를 권고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IMF는 국가에 따라 다릅니다. GDP의 0.5% 정도를 통상적으로 권고를 합니다. 우리나라 GDP를 따져 본다면 IMF의 권고대로 한다면 액면으로 구태여 말하자면 한 9조 정도가 되겠습니다.

○유승희 의원 그러면 지금 노인빈곤 해소에 당장 필요한 금액을 아까 2조~3조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면 여기에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의원님, 추경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가 경기 상황 종합적으로 같이 고려를 하고 있고요. 노인, 어르신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조치가 저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필요하다는 것이 꼭 기초연금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보건대는 노인의 일자리라든가 또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과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에 대한 집행 상황과 우선순위를 좀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승희 의원** 노인빈곤 해소를 위해서 2조~3조 추경을 긴급하게 편성해야 합니다. 전혀 하실 생각이 없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추경 편성 여부를 포함해서 검토를 하게 되면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같이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기초연금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30만으로 올리는 정부의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그 스케줄만이라도 차질 없이 가는 것이 일차적으로는 저희가 가장 당면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유승희 의원** 올해는 추경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증세로 재정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부총리께서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최고세율 인상, 70%까지 하는 부분 그리고 부유세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의원님,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을 작년에 42%로 저희가 올렸고요. 근로세가 우리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본다면 사실 OECD 국가에 비해서 그다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근로소득세를 갖다가 작년에 42%로 최고세율을 올린 마당에 70%까지 올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안정적 재원 확충을 위해서 또 복지재원 확충을 위해서 최고세율이라든가 부유세 말씀은 지난 이삼 년간 즉 꾸준히 주신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채택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정부로서도 그것에 관해서는 그런 측면에서 짚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승희 의원** 얼마 전에 한겨레 신문에서 우리 정부가 조세감면제도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다. 너무 많이 감면해 주고 있다. 그런 제도 정비를 아직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한 게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조세감면에 관련……

○**유승희 의원** 그것도 재원 대책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예, 조세감면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제까지 초지일관해 왔던 것은 고소득층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는 꾸준히 축소시켜 왔고요. 저소득층을 위한 여러 가지 세제 지원적 측면의 감면은 오히려 늘려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이 양자를 합한 전체적인 조세감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정부가 좀 정비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희 의원** 조세감면의 역진성 해소를 위한 대책을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의원님 지적도 있으셨고 또 정부로서도 고소득층에 대한 조세감면제도에 대해서는 꾸준히 축소를 시켜 와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런 감면에 있어서의 역진성을 최소화하려는 것은 정부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도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 세제 개편을 검토하는데 있어서도 그 원칙을 견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 의원** 그러면 앞으로도 최고세율 인상이라든지 부유세 도입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를 진행시키지 않을 예정이신지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아까 총리님께서 부유세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도 부유세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 주셔 가지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짚어 봤습니다. 해외에서 부유세를 실지로 채택해서 도입한 국가도 있고요. 또 도입했다가 문제가 있어서 다시 철회한 국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우리 경제 현실에서 작동이 되려면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성, 국민적 공감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짚어 봐야 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짚어 보고 있기는 하지만 당장 제도의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승희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예, 한번 저

회도 짚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유승희 의원** 짚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최고세율이 70%였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예, 알고 있습니다.

○**유승희 의원** 그리고 노인빈곤 해소를 위해서 2조~3조 추정 긴급하게 편성해야 된다는 주장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예, 유념하겠습니다.

○**유승희 의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초생활을 넘어서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려는 우리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비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득 격차, 양극화 반드시 극복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국가가 여야와 정파를 떠나서 정책으로 그리고 입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품위 있는 국회를 만들어 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주승용** 유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서구 출신의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승용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 서구 출신 국회의원 김상훈입니다.

총리님 모시겠습니다.

요즘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시각차가 있겠습니다. 다들 현장에서 절규에 가까운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소득주도성장은 너무나 많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식상하기 이를 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기업들의 투자 의욕이 너무나 떨어져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한 요인으로 과격한 노조활동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11월 22일 날 민주노총 금속지부 산하 유성기업지회에서 당 회사 노무담당 이사를 한

시간 동안 감금한 채 집단 폭력을 행사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회사에서는 여섯 차례나 경찰 출동을 요청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해당 노무담당 이사가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실려 가는 그 40분 동안 지켜보고만 있었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항의 농성도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6월 민주당 지도부의 지방선거 군산 지원 유세 시에 민주노총 관계자가 난입을 시도하면서 했던 말들이 지금 모니터에 뜨고 있을 겁니다.

‘어디 x가 주인을 물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문장을 이어 보면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x가 주인을 물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갑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집권 여당 지도부에 민주노총 관계자가 집에서 기르는 반려동물과 같이 호칭하면서 주인을 물고 있다고 꾸짖고 있습니다.

총리님, 민주노총 관계자가 이런 발언을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까지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노동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폭력이 정당화되거나 해서는 안 되고요.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폭력이 벌어지는데도 경찰이 그렇게 대처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책임을 물어야 될 정도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훈 의원** 유수의 언론들은 민주노총의 끝없는 촛불 청구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이 위대한 촛불정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민주노총이 촛불집회를 기획하고 판을 깔아 주고 정권을 잡게 만들어 줬기 때문에 자신들이 주인이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고, 그 촛불정신은 달리 표현한다면 정권을 잡게 만들어 준 민주노총이 청구하는 청구서에 국민이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관계 설정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 한 해 동안 민주노총 관계자는 민주당 대표실 점거 농성, 서울고용노동청장실, 대구고용노동청장실, 한국잡월드 사무실, 김천시장실 등등 여러 곳의 관공서 또는 민

간기업 사무실에 난입을 해서 어떤 지역은 집기와 의자를 던지고 서류를 집어던진 아수라장을 만든 그런 행패가 있었습니다.

민주노총의 이런 과격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 총리께서는 행정부를 이끄는 입장에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엄정한 법집행으로 법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근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운동을 하건 어떠한 주장을 하건 법을 지키는 것이 사회를 위해서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그 노동조직 자신들을 위해서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행동 방식으로는 다수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는 고언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상훈 의원** 민주노총이 1대 주주로 있는 28개 대기업 사업장에서 버젓이 고용세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의 명백한 위반사항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묵과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어떠한 조치도 지금 현재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따가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 나오십시오.

다시 우리 기업의 투자욕을 저하시키는 여러 가지 사례들에 대해서 부총리님께 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우리 홍남기 부총리님은 경제정책에 대한 주도적 의사결정권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예, 갖고 정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상훈 의원** 청와대가 부여한 가이드라인 안에서의 의사결정권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그렇지 않습니다.

○**김상훈 의원** 지금 우리나라 경제지표가 참혹할 정도로 성적표가 비참합니다. 작년 경제성장률은 우리나라가 2.7%를 기록했어요. 3% 경제성장률을 시현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진 미국이 2.9%를 시현할 때 우리가 2.7%입니다. 올해는 2.5%를 전망하고 있고 2.1%를 전망하고 있는 연구기관도 있습니다.

BSI(기업경기실사지수)는 48개월 동안 연속 100 이하입니다. 수출 감소율은 지난달 드디어 두 자

릿수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국내 생산능력은 1971년 이후에 최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 상황에 대해서 우리 홍남기표 경제부흥을 위한,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들이 있는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의원님, 지금 여러 가지 지표를 말씀 주시면서 최악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작년도에 우리 경제가 성장한 2.7%는 OECD 국가들하고 비교해 보면 결코 낮은 숫자는 아닙니다. 제가 성장률이 높다고 강변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가 좋다고 강변하는 것도 아니지만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본다면 2.7%가 결코 낮은 숫자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저희 정부도 경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의 경기지표와 관련되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굉장히 어려운 지표도 있습니다마는 또 개선의 조짐을 보이는 지표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두 가지 지표의 동향을 같이 좀 봐 주셔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제 이름을 붙이면서 소위 나름대로의 경제정책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제 개인 이름을 붙여서 홍남기표 경제정책을 넣기보다는 당장 우리의 경제활력을 높이는 데 우선적으로 집중하고자 합니다.

○**김상훈 의원** 좋습니다.

기업의 안정적 경영 환경을 위협하는 제도들이 현재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입법 시도가 있습니다. 지배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최대 3%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3%룰, 집중투표제와의 결합, 노동이사제 도입, 이익공유제 도입, 다중대표소송제, 특히 국민연금을 활용한 스튜어드십 코드 이런 것이 다들 기업의 경영권에 대한 여러 가지 개입과 의욕을 떨어뜨리는 그런 제도라고 봅니다.

특히 스튜어드십 코드는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부총리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되어서 지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경영 간섭을 목적으로 했다면 저도 우려가 됩니다.

그러나 정부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에는 기업의 투명성이라든가 신뢰성을 확

보하려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구요. 이를 통해서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과 같은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는 데 일차적으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의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상훈 의원** 지금 현재 불행하게도 그렇게 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국민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조성하고 있는 국민연금을 가지고 정부가, 국민연금이 재무적 투자가의 입장에 머무르지 않고 도를 넘어선 경영권 개입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부총리님이 한번 지켜보셔야 되고 만약에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부총리님도 목소리를 내 주셔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거위를 잘 키워서 황금알을 낳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기업이라는 거위를 키워 줘야 돼요.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치는 거위의 배를 갈라서 알을 꺼내고 죽은 거위를 내팽개치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하는 우려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한 고민을 함께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총리님 다시 모시겠습니다.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을 마치고 온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더 이상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 북은 핵 개발 의사도 능력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난 12일 날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보고 내용이 있습니다.

한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는 무관하게 북한은 여전히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고 핵 미사일 조립·생산 시설을 민간시설이나 비군사시설에서 반복적으로 활용하면서 핵 개발에 임해 온 그런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고농축 우라늄 확보에 필수적인 원심분리기도 구매를 한 정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무총리 이낙연** 정부는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북한의 동향을 낱알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보는 공유하고 있습니다. 동향은 주시하고 분석하지만 그 동향이 무엇을 위한 것이라든가는 것은 한미 양국 정부 모두 아직 결론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북한이 현명한 판단을 해 주길 기대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한 비핵화가 남북, 북·미 그리고 한미 정상 간에 합의된 용어입니다. 그것을 이제 북한이 응답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큰 제안을 던졌는데 그에 대한 응답으로서 비핵화 의지를 입증해 주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김상훈 의원** 북한의 비핵화가 남북 평화 로드맵의 전제조건임은 확실합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최종적인 비핵화의 목표가 어떤 모습이나에 대해서 아직 최종적인 합의가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바로 그 문제가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이 제안했던 것 중에 속해 있는데 그에 대한 답을 듣지 못해서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은 전략적 목표에서 하등의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훈 의원** 논점이 좀 흐려지는 것 같은데…… 북한의 비핵화가 남북 평화로 가는 로드맵의 필요충분조건임은 확실합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당연히 북한의 비핵화가 없이 남북한의 평화가 정착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훈 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총리님 다시 모시겠습니다.

부총리님, 남북경협을 얘기할 때 북한의 비핵화가 가장 필요한 필요충분조건이고 그다음에 경협에 소요되는 총자금의 소요액이 나와야 될 테고, 그 부담 주체는 누구이며 투자한 자본 회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원칙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혹시 그런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남북경협과 관련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의원님, 대북 제재 때문에 상당히 진전이 안 되고 있는데요. 정부로서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잘 해결돼서 대북 제재가 해소될 것을 대비해서 나름대로 남북경협에 대한 검토를 내부적으로 조용하게 진행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경협에 대한 소요액이라든지 재원이라든가 투자 회수 방식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가 고민하는 사항이지만 그것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상훈 의원** 지난해 12월 달에 총투자액조차

도 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 철도연결 착공식을 했어요. 정말 웃지 못할 코미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북 군사합의를 도출한 이후에 국군의 날 행사에서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그 길은 어떻게 보면 아무도 가서는 안 되는 길이기 때문에 가지 않았던 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천만 국민의 생명이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경험은 절망과 고통이 그 내용이라면 국민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집단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저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께서 충분히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침묵도 폭력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 국회의원 어느 누군가는 청와대나 대통령께 ‘더 이상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용기 있는 노선 수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멀지 않은 장래의 역사는 대한민국이 망국으로 이르는 그 시발점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다고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집권 여당 의원님들과 국무위원들의 분발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주승용 김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화성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욱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화성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원욱입니다.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과 고 장자연 씨 사건, 새로운 증언과 증거들이 나오면서 특권층과 검찰조직의 추악함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 과거사위 활동을 2개월 연장했지만 실제 밝혀질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자리의 의원들조차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7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리얼미터의 조사입니다. 70%가 넘는 국민이 김학의·장자연 사건에 특검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검찰의 전형적인 부실수사인데요. 검찰 총장, 법무부장관 등 윗선의 개입이 없이 가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일반적으로는 모르기가 어려울 거라고 추측합니다마는 이번 사안에서 어떻게 됐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원욱 의원 저는 권력의 고위층 개입이 없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준엄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학의·장자연 사건 특검,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우선은 현재 진상조사단이 조사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 권고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특검이 필요한 단계라면 국회에서 어차피 논의해 주셔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원욱 의원 아니, 그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함께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가 합의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상황에도 대비해서 법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 도입이 가능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이런 법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원욱 의원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지시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상조사단과 과거사위원회의 최종 결론을 봐가면서 정부 내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원욱 의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검 과거사조사위, 2개월 연장됐습니다. 그런데 진실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대검 감찰본부가 직접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들어 보십시오. 특임검사를 임명하고 검찰 본부에 파견해서 기간을 두지 말고—2개월로 한 정할 필요 없습니다—철저히 조사해 국민적 의혹을 낫달이 밝혀내야 됩니다. 그래야 검찰의 추락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총리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 문제들은 검찰과 경찰의 대국민 신뢰가 그나마 회복될 것이냐, 아주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이냐가 걸린 문제입니다. 제가 엇그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검찰과 경찰은 몇몇 개인을 살리고 조직을 죽일 것이냐, 아니면 그 반대로 몇몇 개인에게 희생을 주더라도 조직의 신뢰를 살릴 것이냐의 선택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원욱 의원** 특임검사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경제활력을 위해서 대통령과 정부가 많은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바닥은 여전히 차갑기만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역시 근본적으로는 양극화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제일 큰 요인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으로서는 고용의 위축과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이 깔려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이원욱 의원** 문제인 정부의 첫째 국정과제는 일자리입니다. 그런데 일자리 만들기에 실패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일자리 문제는 문제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괴롭히는 가장 큰 사안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총리님,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을 갖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기존에 많이 갖고 있는 대책만 해도 그것을 설명드리기는 시간이 부족할 정도이겠습니다마는 요컨대 하나라도 성과를 더 늘려 가는 그러한 정책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원욱 의원** 일자리만큼 중요한 복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정부라고 출범했지만 몇몇 경로를 잘못 택함으로써 일자리를 없애 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52시간 근로시간제, 시간제강사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정규직화된 시간강사는 환영하고 있지만 훨씬 더 많은 강사가 대학강사 자리를 떠나

야 했습니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경직하게 만드는, 경직성을 높이는 정책을 펴 온 것 또한 일부 있습니다. 물론 유연성과 함께 노동안정성,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문제를 동시에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말씀 주신 대로 정책이란 취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서 그것이 어떻게 이행될 것인가 또는 왜곡될 소지는 없는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는 않겠는가 하는 것 등등을 훨씬 더 정교하게 점검하고 따져 가면서 정책을 시행해야겠다 하는 것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원욱 의원** 그래서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미래 문제와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풀어 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가 보자는 의미의 제안입니다.

먼저 안전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 문제 매우 중요하지요. 안전을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 몇 개만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이낙연** 하도 많습시다만 우선은 산업재해, 교통사고, 자살을 3대 생명 지키기 프로젝트로 제가 직접 관장하고 있고요, 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대진단도 지금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마는 과거에 세월호 침몰 이후에 대규모로 벌였던 것을 이제는 그 대상을 축소하더라도 제대로 점검하자는 쪽으로 전환하고 있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점검을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원욱 의원** 수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과연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입니다. 18년에 역시 많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를 보며 온 국민이 울었습니다. 안전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만약에 또 다른 사고가 터진다면 현 정부에 대한 민심의 향배도 가늠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혹시 두렵지 않으신가요?

○**국무총리 이낙연** 늘 조바심이 납니다.

○**이원욱 의원** 한번 표를 봐 주십시오.

붕괴사고 건수가 2008년 이후에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를 보입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건축물, 교량, 육교 같은 우리 사회의 기반시설들이 일제히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요. 하필이면 그해에 갑자기 늘어난 것은 무엇일까, 좀 더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원욱 의원** 크게는 SOC 예산은 계속해서 줄고 있고 작년 12월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제정됐지만 관련 예산은 여전히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총리님 말씀하신 대로 본격적으로 SOC가 건설된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이 끝난지 40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노후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인리히 법칙을 알고 계실 텐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숫자 3개를 외웁니다. 1, 29, 300인데요 큰 대형사고가 있기 전에 29개의 중간 쪼름 되는 사고가 있고 300개 쪼름 되는 아주 자잘한 사고가 있다, 그러니까 작은 사고가 많이 나면 큰 사고도 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법칙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원욱 의원** 붕괴사고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세월호와 같은 대형사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나지 않을 것이다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아이고, 끔찍한 말씀 안 해주셨으면……

○**이원욱 의원** 그러니까 하인리히 법칙입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늘 그런 조바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사고이더라도 늘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이원욱 의원** 그래서 제안드리겠습니다.

지하공동구를 전면 설치하고 노후 학교시설물을 전면 보수하고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포함해서 올해를 국가안전 SOC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장기적인 종합대책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미세먼지 추경 계획하고 계실 텐데요, 그것만이 아니고 국가안전 SOC 원년 선포에 맞춰서 미세먼지를 포함한 종합적이고 안전한 SOC 추경을 편성하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렇지 않아도 노후 SOC가 여러 방면에서 일제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지

관리, 안전을 위한 보수의 사업은 좀 더 대대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표를 보여 주셨습니다마는 SOC 예산 중에서 유지관리비가 차지하는 비중, 비중은 올라가지만 액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 14%인데 미국이나 일본은 30~50%까지 되거든요. 훨씬 더 늘려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원욱 의원** 장기적으로 재원 확보가 관건인데요 아이디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표는 19년도 공자기금에 연간 1조 원 이상 예탁하는 기금과 특별회계입니다. 이것만 해도 연간 16조가 넘습니다. 특히 교통시설특별회계는 19년에만도 3조 7000억 원, 총액의 44.2%를 공자기금에 예탁할 예정입니다.

회계 이름을 교통 및 안전특별회계로 바꾸고 안전에 체계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목적대로 쓰지 못하는 돈을 국민 안전에 투자하자는 내용인데 총리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공자기금관리기금에 굉장히 큰돈이 들어가 있는데요, 꼭 필요한 데는 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전문적인 것은 관계부처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욱 의원** 다음 보겠습니다.

국민의 정부 때 국회의원을 하였으니 아마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는데요, 당시 전자정부사업의 성과와 평가는 어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정말 여기 표에 나오는 것처럼 짧은 기간 내에 세계 최고의 평가를 받았습시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시고 국회의 도움을 받아서 전자정부법이라는 법을 그때 처음 만들었습니다. 대단히 의욕적으로 했었고 그때도 IT나 콘텐츠산업의 중요성을 대통령께서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저도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것이 '스필버그의 쥬라기 공원 한 편이 현대자동차 200만 대 수출하는 것과 맞먹는다' 그 말씀을 하도 여러 번 하셔서 제가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원욱 의원** 그러한 평가와 아울러 IT 인력을 대거 양성했고요 김대중 정부 벤처붐 조성의 밑거름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현 정부의 전자정부 사업은 추진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총리께서는 당시와 지금의 추진체계의 차이점을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좀 알려 주시지요.

○이원욱 의원 핵심은 컨트롤타워의 문제입니다. 국민의 정부 때의 전자정부 사업은 청와대가 직접 관할하고 정부위원을 행자부·정통부·기획부차관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행안부차관이 관할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타 부처의 참가도 굉장히 부족하고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총리님, 2000년 초반기와 지금은 매우 유사한 산업변혁기입니다. 4차 산업혁명기에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인력 양성이고 새로운 전자정부 사업 추진이 그래서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추진하시는 제2 벤처붐을 위해서도 절실합니다.

정부 문서를 지금부터 5년間に 걸쳐 블록체인으로 바꾸어 봅시다. 정부혁신을 이루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할 수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당시의 전자정부 추진 경험을 되살려 대통령 산하에 전자정부 4.0 추진단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전자정부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어떻게 개편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제안까지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욱 의원 총리님 들어가시고 산업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정신이 없으시겠습니다. 어제 포항 지진 원인 발표 때문에도 더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이 포항으로 선정된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주)넥스지오 컨소시엄이 주도해 문헌조사 또 지질조사를 통해서 부지조사를 실시했고요 또 이 과정에서 기존 조사, 연구자료 등이 가장 많이 축적된 포항을 그 부지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 개발 사업의 부지 선정, 진행 과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엄정하게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원욱 의원 포항시는 활성단층 지역인데요 우리나라에 그 정도를 제대로 알 수 있는 전문 연구자가 한 명도 없는 것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포항 지역에 활성 단층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알고 있지 못했던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욱 의원 사업 대상지 선정에서 특혜는 보이지 않았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 사업자가 문헌조사와 실지조사를 거쳐서 선정했다고, 지정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부지선정이 적정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따로 별도로 엄중하게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원욱 의원 꼭 그래 주시고요.

박근혜정부 때 물을 주입하자 70여 회의 지진성 진동이 발생했습니다. 장관님, 당시에 보고받은 박근혜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그때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주)넥스지오컨소시엄은 미세진동 관리 매뉴얼에 따라서 물 주입을 중단하고 배수조치 등을 취했고요, 이러한 조치 내용을 전담기관인 에너지기술평가원과 정부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원욱 의원 기사에도 많이 났던데요, 작업 중 지진이 발생하면 외국은 어떻게 대처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외국의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 스위스는 3.4 정도의 지진이 난 경우에 일단 중단하고 조사를 벌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욱 의원 그렇지요. 중단하고 조사해서 결국에는 사업이 최종적으로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원욱 의원 박근혜정부 때는 지진 발생의 전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진행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보고받으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별도로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원욱 의원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두 차례에 걸쳐서 물을 주입했는데요. 그런데도 보고 못 받으셨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예, 물 주입에 관한 사항은 정부에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이원욱 의원 그전에 3.1의 지진도 있었는데요? 전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예, 물 주입에 관련해서는 연구 컨소시엄이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서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욱 의원 지금 포항 민심이 매우 무섭습니다.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할 때 당시 정부의 태도가 저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의 지역구였기에 무리하게 최종 선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정부 차원의 강력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현재 동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국민감사가 청구되어 있는 사정입니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정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진행 과정 또 부지 선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엄중하게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원욱 의원 산업부에서도 특별히 조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예, 정부 간에 함께 고민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원욱 의원 들어가시고 부총리 나와 주십시오.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정책을 쏟아 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막상 추진되는 곳, 시행되는 곳은 몇 개 없어 보입니다. 갈등 때문입니다. 많이 답답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예.

○이원욱 의원 기재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정부도 경제정책 방향을 설립하면서 올해 사회적 갈등에 대해서는 사회적 양보와 타협에 의한 사회적 대타협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목표 하에 여러 가지 갈등요소에 대해서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원욱 의원 일상적인 정부 말고 기재부요, 기재부가 갈등 해소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일단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주무부처 중심으로 하고 저희 기재부는 현재까지 지원 중심으로 해 왔는데요, 이번에 혁신성장본부를 정규직제화하면서 그 갈등 기능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저희가 별도 티오를 따서 정규직제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원욱 의원 최근 사회적 타협을 이뤄낸 카폴도 여전히 갈등이 남아 있습니다. 이 상태라면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이 임기 내 얼마나 가능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부총리님, 어제 언론기사인데요 경사노위에서

막혀 있는 현안들입니다. 경사노위를 보면 노동문제 풀기에도 여력이 없어 보이는데 경사노위에서 이런 문제들이 타협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비록 경사노위에서 노동현안 중심으로 현재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저는 경사노위와 같은 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탄력적 근로제와 관련해서 비록 완전한 합의를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앞으로도 경사노위가 이와 같은 시도를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원욱 의원 희망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 기재부가 특별히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 갈등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재위 때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기재부 내 각종 갈등 해결을 위한 컨트롤타워인 사회적대타협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갈등 해결을 위해서 기재부가 이제 직접 노력해야 됩니다.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아까 말씀 올렸던 것처럼 기재부 혁신성장본부를 저희가 혁신기획단으로 정규직제화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혁신성장을 위한 여러 가지 갈등요소들을 기재부가 그 혁신기획단에서 직접 다룰 수 있도록 조직보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월부터 정식 직제가 발족되면 본격적으로 그와 같은 기능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욱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회는 수년째 국민 신뢰도 최악집단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화와 타협으로 국가비전을 설계하고 민생을 챙겨야 할 국회가 허구한 날 싸움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심은 무섭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정부의 등장과 같이 어느 한순간 기성정권이 국민으로부터 탄핵받을 수도 있습니다.

협상은 양보를 전제로 할 때만 가능합니다. 국민을 편 가르는 국회를 극복해야 합니다. 민생을

중심으로 대화와 타협, 상생과 협치의 공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주승용** 이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김천 출신의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언석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승용 국회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북 김천 출신의 송언석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만 튀어도 연쇄 폭발할 듯이 뒤엉켜 있는 소용돌이 먹구름의 기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심상치 않은 경제지표들의 추락 사태가 이어지면서 새로운 지표가 나올 때마다 최악의 신기록 행진을 하다 보니 오히려 엄혹한 경제 현실에 무감각해지는 부작용이 유발됩니다.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무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세금중독 분배정책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주요 논리는 임금 인상이 소비와 생산 그리고 투자 확대를 통해서 성장을 유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시대착오적인 좌파적 이념에 휩싸인 위정자들의 잘못된 의식구조의 산물일 뿐이며 대한민국 국민과 경제를 대상으로 한 위험한 생체실험이 아닌지 많은 경제학자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악’ 소리 나는 제앙적인 경제입니다. 일자리 참사, 쪼개기 고용, 실업자 그리고 최악의 경기동행·선행지수, 소득 양극화, 수출 감소 이 모든 것이 다 최악의 지표들입니다.

지난해 취업자 증가수가 전년 대비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31만 명을 호가하던 부분이 지금 9만 7000명으로 줄었습니다.

경제 허리인 40대의 취업자도 27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삼사십대의 일자리를 합쳐서 볼 때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한 수치입니다.

‘일자리 폭망 정부’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 있는

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저희들로서도 많은 과제를 안겨 주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삼사십대 고용의 문제는 삼사십대 인구 자체가 감소하고 있고, 삼사십대만 놓고 보면 남자의 경우에 고용률이 90%다 하는 이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 엄중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승용 부의장, 이주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송언석 의원** 인구구조의 변화는 지금 하루 이틀에 된 것이 아니고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과거 정부에 못했던 부분, 적폐가 누적돼 있는 부분을 해소해 주기를 희망하는 국민들이 새로운 정부를 선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성과, 일자리의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강하게 질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단히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송언석 의원** 화면 계속 보시겠습니다.

지금 실업률을 보시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실업률이 3.8%로 사상 최악입니다, 2002년 이후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30대와 40대가 조금 전에 총리님의 답변과 달리 실업률도 지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30대는 몇 년 됐습니다마는 40대의 경우에…… 30대는 작년과 재작년 두 해 연속 실업률이 악화되었고 40대는 작년에 2.1%에서 2.5%까지 실업률이 급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제조업의 구조조정 등의 영향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도 역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송언석 의원** 무겁게 받아들이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물론 여러 가지 대책을 쓰고 있습니다.

○**송언석 의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국무총리 이낙연** 그것을 다 길게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취업, 고용을 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드린다거나 또는 근로자들의 전직을 위한 도움을 드린다거나 그렇지도 않을 경우에 실업보험을 드린다거나 하는 등등의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언석 의원** 총리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실

업이 발생하는 부분은 제조업이라든지 도소매라든지 음식, 숙박 쪽입니다. 거기에 우리 대부분의 근로자들 삼사십 대, 우리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고용돼 있는데 제조업은 지속적으로 마이너스입니다.

화면을 다시 한번 보시지요.

보시다시피 이번 정부 들어와서 제조업은 2018년 들어오면서 계속 마이너스로 가고 있습니다. 과거 수십 년 동안 경제 개발과 발전이 되면서 농림어업 쪽에 종사하는 인원들이 계속 줄었는데 최근에 와서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10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제조업의 경우에는 국제적인 경쟁력의 약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기업이나 정부가 그때그때 대처하지 못한 것이 누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어업의 경우에는 좋은 의미에서의 귀농·귀촌의 증가를 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송언석 의원** 좋은 의미의 귀농·귀촌은 어떤 점을 말씀하시는가요?

○**국무총리 이낙연** 제2의 인생을 개척하기 위해서, 벌써 그게 한 사오 년 됐을 겁니다. 이촌향도,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가는 사람 수보다 이도향촌, 도시를 떠나서 농촌으로 가는 숫자가 더 늘어난 것이 2012년이었습니까, 2015년이었습니까? 꽤 오래된 일이지요. 그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언석 의원** 그러니까 지금 총리님 지적하신 대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좋은 의미에서 귀농·귀촌을 선택한 경우라면 대단히 만족스러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역구에 520여 개가 되는 마을회관을 순회하면서 의정보고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주십니다. 제조업에 종사하다가 중간에 해고가 되어서 또는 정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와서 할 것이 없어서 지금 시골 오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계실 겁니다. 계실 텐데, 예를 들어서 과거 정부 때의 귀농·귀촌은 전부 좋은 것이었고 문재인 정부의 귀농·귀촌은 모두 나쁜 것이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겠나……

○**송언석 의원**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나눌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무총리 이낙연**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송언석 의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부에서는 명확히 분석해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과거 정부에서도 귀농·귀촌이 물론 있었지요. 있었지만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 사오십 년 동안 농림어업 분야에 종사하는 인원 자체는 굉장히 지속적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와서 한 이삼 년 사이에 이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 뭔가 이유가 있다. 이것을 잘 분석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아직 정부에서 나온 자료에는 왜 귀농·귀촌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10만 명, 11만 명을 넘는 이런 숫자가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원인 분석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저희들도 충분히 감지하고 있고요, 분석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언석 의원** 화면 보시겠습니다.

초단시간 취업자가 문재인 정부 2년간 253만 명으로 지난 그전 4년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늘었습니다.

지금 경기동행지수와 선행지수가 8개월 연속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72년도에 있었던 석유파동, 오일쇼크 이후에 최장기간입니다. 무려 46년 만입니다.

거기다가 소득 양극화가 또한 최악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득 1분위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소득 5분위 상위 20%는 점점 더……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의 빈익빈 부익부는 소득이 전체적으로 늘어나면서 있었던 데 반해서 지금 현재는 오히려 가난한 계층, 소득이 낮은 계층의 소득이 줄어들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악성 소득 양극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소득 5분위 배율로 보시면 2018년도에 5.47배로 갑자기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소득주도성장에 의한 최저임금 급등에 따라 가지고 소득 100만 원 받던 사람이 150만 원 받는 사람은 좋은데 오히려 100만 원 받던 사람이 해고되어서 소득이 체로가 되는 이런 이유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수용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1분위 최하위 소득계층 20%의 절반 가까운 숫자는 70대 이상입니다. 급격한 고령화의 영향도 꽤 크다고 보고요 노인빈곤의 문제가 동시에 제기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쪼개기 고용 말씀 주셨는데 많이 줄어든 것 중에 하나가 임시직 고용 숫자입니다. 그런 분들이 또 임시직에 고용되고 있다 이런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 자리라도 공공분야가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언석 의원** 총리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한 아르바이트 직장에 오랫동안, 오랜 시간 근무하면 좋은데 경영주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주휴시간이 포함돼가지고 주휴수당을 많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시간 자체를 대폭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학생 입장에서는 두 군대를 뛰어야 됩니다. 또 경영주 입장에서는 다른 학생을 또 구해야 됩니다. 모두가 어려운, 모두가 힘든 세상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많은 경제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이낙연** 그것은 충분히 받아들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임금 근로자들의 상황은 많은 경우에 도외시되고 있습니다. 그쪽도 우리가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고통받게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몹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송언석 의원** 화면 계속 보시겠습니다.

수출도 지금 3개월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외환보유액이 많이 늘어난 것을 이 정부의 치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액수로서는 사상 최고액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나온 대로 GDP 대비로 보면 하강하고 있습니다.

○**송언석 의원** 국가채무의 경우에도 경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국가채무가 늘어나듯이 마찬가지로 자산의 경우에 해당되는 외환보유고도 경제가 커지면 자동적으로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GDP 대비 비율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S&P 신용등급도 보시겠습니다. 이 정부에서 사상 최고라고 했지만 사실은 2016년 8월

전 정부부터 현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디스도 마찬가지입니다. 15년 12월부터 현행 등급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피치도 마찬가지입니다. 2012년 9월부터 현행 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 잘해서 국가 신용등급이 사상 최고가 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늘 말씀드리지만 공과 과는 계승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전 정부의 잘한 일을 부정할 적이 없습니다.

○**송언석 의원** 총리님, 공과 과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시간은 연속선상이기 때문에 정책도 연속선상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 잘한 일이 뭐가 있느냐 했더니 신용등급 얘기를 하고 외환보유고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알고 보니까 다 전 정부에서부터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현 정부의 치적인 것처럼 포장해서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국무총리 이낙연** 그러면 방금 말씀 주신 여러 가지 우리 경제의 과제, 이전 정부에서부터 누적돼 왔던 것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죄다 부정하고 온통 니들 탓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다소의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송언석 의원** 이전 정부에서 잘못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정권을 바꿨지요. 새로운 정부는 잘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더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노력하고 있고요. 좀 기다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언석 의원**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국민들은 지금 힘들다가 아니라 이미 끝났다, 다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의원님, 의원님이야말로 300명 의원 가운데서 국가 경제정책을 가장 오래 다루어 오신 분 중의 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경제정책에 대해서 건설적인 제안 또는 과거 정책의 반성 이런 것을 균형 있게 갖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송언석 의원** 다음 화면 계속 보시지요.

소비자심리지수도 이번 정부 들어서 대폭 악화되었습니다.

기업경기실사지수도 대폭 악화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심리들도 지금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향후에 경제는 얼마나 더 성장할지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이견 잘 알고 있고요. 단지 1월 통계를 보면 미세하지만 개선 기미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송언석 의원 2월 달 통계를 보시면 취업자 숫자가 좀 늘어났지요. 그러나 그것은 종전에 3월부터 시행하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 2월로 당겨졌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거기 노인 일자리가 무려 30만 명이 넘게, 39만 명인가 늘어났습니다. 그 효과일 뿐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률이 OECD 상위라고 했는데 알고 보면 30-50 클럽 중에서 우리가 1위, 2위를 다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OECD 36개국 중에서는 작년도 성장률이 21위에 불과합니다. 2016년 11위에 비해서는 무려 10계단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저희들이 주요 국가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30-50에서는 양호한 편이고요. 저희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송언석 의원 30-50 클럽에서 성장률이 미국과 1, 2위를 다투고 있다는 것 가지고 전체적으로 OECD 국가 중에서 1, 2위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호도할 생각 없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송언석 의원 시간이 다 돼서,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감사합니다.

○송언석 의원 고맙습니다.

우리가 가진 골든타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을 모아서 비상경제원탁회의라도 구성해야 할 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미래 대비보다 과거 캐기에만 골몰하는 현 정부의 도끼 자루 썩는 줄 모르고 있는 이 부분이, 국민들은 대단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이제는 폐기하고 국민들을 이 나라에서 구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주영 송언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정읍·고창 출신의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엽 의원 정읍·고창 유성엽 의원입니다.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해 우리 경제성장률은 6년 만에 가장 낮은 2.7%입니다. 전문가들은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2% 초반, 심지어 1% 후반으로까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소득 격차, 즉 양극화 역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최근 경제에 긍정적 신호가 왔다', '개선된 모습' 운운하면서 안이한 인식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명박·박근혜정부 때보다도 더 어렵다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어떻게 비교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늘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것은 어려운 것대로 대처해 나가면서 새로운 경제 활력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성엽 의원 이명박·박근혜정부는 국정을 농단하고 적폐를 쌓았고 남북관계를 파탄 내고 경제까지 망친 정부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적표가 이명박·박근혜정부보다 더 나쁘냐 여기에 저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어느 것이 먼저냐 이전에 우선 세계경제의 하강이 있을 테고요, 특히 우리가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는데 중국을 포함한 주요 거래 상대국들의 경제가 하강하고 있다는 것이 있을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급격한 고령화와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한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정책 변화 과정에서 생긴 리스크도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유성엽 의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확한 답변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경제난의 가장 주요 원인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것은 플러스알파일 뿐이라고 생각합니

다. 근본적인 경제난의 원인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시행해 온 잘못된 경제정책, 즉 경제 적 폐에 대해서 제대로 청산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이 미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성엽 의원 물론 잘못 설계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과속이 현재의 경제난을 가속화시킨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저는 그것은 플러스알파가 아니라 플러스알파 제공 정도에 해당된다는 생각인데, 이명박·박근혜정부의 경제 부진의 진짜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채 실패한 경제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 거기에다가 오히려 한술 더 뜨고 있는 것이 지금 경제위기의 주범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우리 내부의 요인만 보자면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이 계속 약화되고 있었는데 기업도 정부도 손을 놓고 있었던 기간이 길었다는 것이고요, 또 제조업 대신에 키워야 할 서비스산업의 육성이 미진했다, 신산업의 도약이랄까요 하는 것이 매우 지체됐다 하는 것이 산업만 놓고 보면 큰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양극화와 고령화에 충실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유성엽 의원 여전히 제 기준에서 볼 때는 답변이 미진합니다.

문제인 대통령 대표 공약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이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유성엽 의원 제가 기재부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구체적인 자료는 제출하기 어렵습니다’라는 것이 답변입니다. 저는 무슨 말 못 할 사정이 있는 것인지, 파악이 안 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직접 총리께 묻겠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그동안의 구체적인 창출 실적이 어떻습니까? 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소요 예산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공공부문 전체를 놓고 보면 공약은 22년까지 81만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고 얼추 추산한 것은 5조 9000억 원 정도입니다만

어떻게 잡을 것이냐, 공무원들의 직위가 어떠냐, 재임기간이 어떠냐 이런 것을 감안하면 들쭉날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추산하는 것은 그 정도입니다.

○유성엽 의원 차제에 정부가 자료 제출하는 것, 총리께서도 국회에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그것은 이 질문과도 상관없이 한번 짚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국회예산처에서는 공공부문 81만 개 중에서 공무원 17만 명이 뺏히면 총 327조, 연금 포함 시 총 350조 원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작년 예결위 그리고 제작년 예결위에서도 이것이 논란이 됐습니다만 특정 상황을 전제로 한 잘못된 통계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예결위에서 나온 내부 결론이었던 것으로……

○유성엽 의원 그러면 국회예산처가 잘못 판단했다는 것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어떤 분이 ‘이러이러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겠느냐’ 분석해 달라 했는데 거기에 맞춘 결론이었다 이렇게……

○유성엽 의원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정부의 구체적인 정확한 소요 예산 추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예결위 때도 그 문제가 많이 논란이 됐었습니다마는 담당 부처에서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유성엽 의원 여기서 들어가 주시고, 경제부총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에서도 자주 만났어야 하지만 국회가 열리지 않다 보니까 모셨습니다.

지금 나라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좀먹어서 경기 부진을 초래하는 주범은, 아까 총리께서는 다른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재정지출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무리한 확장이다, 재정지출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지출은 주로 생산성이 낮거나 수익성이 떨어져서 민간부문이 외면하는 분야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부문 지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나라 경제의 생산성은 떨어지고 한계생산성은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당연히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가 되고 경기 부진이 초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저는 의원님

하고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재정지출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산성이 낮고 한계생산성을 낮춘다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정지출에 대한 비효율을 많이 강조하시는데요. 사실 일자리라든가 부가가치는 민간이 만들어 내는 것이 맞습니다. 정부도 그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고요.

그러나 재정지출은 재정지출대로 민간이 그와 같은 활력을 찾는 데 지원하는 예산이라든가, 안전망을 보장하는 데 지원하는 예산이라든가 경제에 기본적인 활력을 찾는 데 지원하는 예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유성엽 의원** 생각은 달리할 수야 있지만 참 답답합니다, 그런 답변을 들으니까. 아직도 우리 경제난의 원인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 비중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한 1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엽 의원** 10%.

그런데 정부 예산의 보조를 받는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포함하면 한 20%가 될 것 같은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유성엽 의원** 적은 편이 아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유성엽 의원** 그런데 여기다 대고 계속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겠다라고 하는데 걱정이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좋은 일자리에 대한 기본은 민간에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러나 공공부문이 또 역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취약 근로계층에 대한 재정 일자리는 저는 정부가 의당 제공해야 될 일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성엽 의원** 정도의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현재 경제난을 해소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축소 계획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달리 생각하겠네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아닙니다. 의원님, 공공부문의 축소 말씀 주신 것은, 저는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비효율성이 있다면 그런 비효율을 좀 축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합니다.

○**유성엽 의원** 지난번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카이스트 채수찬 교수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예.

○**유성엽 의원** 그분에게 우리나라 경제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좀 부탁드렸어요. 그랬더니 ‘혁신성장은 무개념, 소득주도성장은 실패, 공정경제는 부분 성과’ 이렇게 평을 하면서 ‘적어도 경제 문제에 관한 한 문제인 정부는 역대 최악의 정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지금 채 교수님처럼 그렇게 지적하시는 분도 있고요, 달리 다른 의견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로서는 소득주도성장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을 거의 이월로 보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자꾸만 이런 지적을 많이 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저는 소득주도성장도 저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 나가야 되지만 또 보강해야 될 분야에 대해서는 같이 인정도 해 주면서 지원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성엽 의원** 소득주도성장 정책 중에서 최저임금 말고 또 뭐가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아까 총리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소득주도성장은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기반을 강화하는 것도 있지만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중산층의 생계비를 경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더 속도를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문제가 됐던……

○**유성엽 의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따가 뒤에 더 논쟁을 하기로 하고.

지난번에 제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혁신성장이 뭔 개념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과거의 방식으로써 그냥 패스트팔로어로서 성장을 이뤄 가

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또 새로운 신산업을 만들어 내는 데 있어서 혁신 개념을 접목시켜 가지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내자는 것이 혁신성장의 요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성엽 의원** 그때 제가 기억했던 것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교육 및 노동시장 개선과 인재 양성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당연히 그것도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성엽 의원** 그런데 거기에 왜 공공부문 개혁이 빠져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지금 저희 정부에서도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특히 노동의 유연성 확보 차원에서도……

○**유성엽 의원** 제가 볼 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공공부문이 먼저 솔선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성엽 의원** 혁신성장에서 중요한 것이 노동시장 개선, 노동 개혁을 말씀을 했는데 공공부문을 개혁하지 않고 노동시장 개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공공부문 개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저는 공공부문이 먼저 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성엽 의원** 당연하지요. 솔선수범하지 않고 어떻게 노동 개혁의 수용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유성엽 의원** 지난주 홍영표 원내대표 연설 들으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예.

○**유성엽 의원** 노동의 유연성과 안정성에 관한 제안에 전적으로 저는 동의를 합니다.

‘덴마크처럼 실업급여를 종전 급여의 70% 수준으로 하고 실업급여 기간도 2년으로 늘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노동의 유연성을 제고했으면 좋겠다’ 이런 연설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그때 아마 원내대표께서 실업급여 70%까지 올리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정부도 실업급여를 계속

확대해 가는 쪽으로 정책을 펴 왔고요. 지금 현재 70%까지는 너무 막대한 재원 소요가 있어서 60%까지 올리는 것으로 해서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성엽 의원** 그때 홍영표 대표께서 그러려면 현재의 9조 원의 실업급여 규모를 26조 원 정도로 올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유성엽 의원** 그 26조 원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아까 말씀을 된 대로 실업급여를 확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하지만 또 재원적 뒷받침이 돼야 현실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70%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유성엽 의원** 아니, 그러면 70%든 60%든 그 소요되는 재원이 있을 것인데, 한 20조 26조 가까운, 어떻게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그래서 저희가 보건대는 복지 확충을 하면서 어차피 재정의 안정적 세입 기반 확보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재정이 갖고 있는 여력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성엽 의원** 공공부문을 과감하게 축소 개혁을 하고 거기에서 재원을 확보해서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고 튼튼하게 확보를 하는 것이지요. 아까 실업급여 문제가 바로 그것인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노동 유연성을 확보해야만 나라의 성장잠재력이 커질 수 있고 경기 부진에서 벗어날 수 있고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부문이 솔선해서 먼저 개혁하고 관련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저는 전적으로 의원님하고 생각을 같이합니다. 그런 부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성엽 의원** 공공기관을 총괄하는 기재부장관 입장에서 그 문제를 한번 심도 있게 들여다볼 것을 강력하게 주문하면서 다시 질문을 이어 가겠습니다.

저는 앞에서 잘못 설계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과속이 플러스알파 또는 플러스알파 제곱으로 작

용을 해서 현재의 경기 부진을 가속화시켰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잘못 설계됐다는 이야기는 세금을 더 걷어서 재정으로 뒷받침을 해야만 가능한 이러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제가 좀 더 신랄하게 비판을 하면 이것은 소득 감축, 경기후퇴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의원님, 소득 주도성장이 주로 재정의 뒷받침에 의해서 하겠다는 원래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유성엽 의원 아니, 아는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최저임금도 마찬가지로 일자리 창출도 마찬가지로 전부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이 됩니까, 지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주도성장의 컴포넌트에 의해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은 재정이 해야 될 역할이고요. 최저임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재정보다는 민간에 활력을 찾아서 최저임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가는 것이 첩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성엽 의원 진정으로 가처분소득을 늘리고자했다면 임금이 아니고 정부가 통제 가능한 수단인 세금을 낮춰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작년에 유류세 15% 한시 인하정책에 대해서 아주 높이 평가를 합니다.

부총리, 이번 기회에 상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할 뜻이 없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의원님, 유류세 인하는 사실상 지난 08년도에 한 번 이루어지고 한 10년 만에 정부가 너무, 경제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서 시행했던 한시적인 조치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유류세 인하 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수 문제도 있고 또 미세먼지와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유성엽 의원 그것 이어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이런 문제들을 다 한꺼번에 고려될……

○유성엽 의원 앞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은 공자 왈 맹자 왈입니다, 그것은.

유류세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세도 대폭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근로소득세는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OECD 국가하고 저희가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의원님의 그런 지적도 있으시고 해서. 저희가 최고세율이 42%이고 OECD가 딱 42%입니다. 저희와 유사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을 본다면 근로소득세가 지금 같은 수준이 적정하지 않은가 싶고요.

○유성엽 의원 지난 2012년 근로소득세수가 20조 원이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예.

○유성엽 의원 작년에는 39조 원이었지요? 6년 만에 2배가 더 건했는데 과연 6년 만에 근로소득이 2배 가까이 올라갔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비중은 내 보지 않았습니까라는 근로소득세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작년에 최고세율을 높인 것 이외에는 큰 변동이 사실 없었습니다.

○유성엽 의원 미세먼지 이야기 아까 앞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미세먼지도 저는 세제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유차가 원인이라고 해서 경유세를 높이겠다는 발상은 정말 단순한 일차원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환경시설에 투자하거나 미세먼지 감축 노력을 하는 법인에게 세금을 감면해 주는 그런 유인책이 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세제 지원은 제가 한번 리스트만 빼 봐도 일곱 가지, 조특법에 의해서 한 다섯 가지하고 개소법까지 포함해서 한 일곱 가지의 세제 지원 조치가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환경오염과 관련되는 것도 정부가 조특법에 의해서 세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세제가 작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합니다. 저희도 최대한 지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엽 의원 부동산 세제는 너무 서두르면 안 됩니다. 공시지가 현실화는 옳지만 지금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중장기적으로 초고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더 높이고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은 낮춰야 합니다. 특히 재벌이 비업무용 토지를 이용해서 자산을 증식하는 것은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의원님, 이번에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지가 관계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고가 부동산에 대한 현실화율을

높였고요. 저소득층, 서민층에 대해서는 현실화율을 굉장히 낮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는 정부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유성엽 의원**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폐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증권거래세는 오늘 정부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증권거래세에 대해서는, 코스피에 대해서는 0.05%를 올해 낮췄고요. 다만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문제가 같이 있는데요. 이 문제는 연계해서, 저희가 내년 상반기 정도에 이 2개를 연계해서 연구 검토를 거쳐서 앞으로 증권거래세 문제하고 양도소득세 확대 문제를 어떻게 연계해서 검토해 나갈 것인가는 내년 상반기에 저희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경제 상황이 좋다고 변명해도 지금 국민들께서 느끼고 있는 어려움이 곧 현실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대로라면 앞으로가 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정부에 거둬 촉구합니다. 변명하지 말고 솔직하게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합니다. 현실에서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는 그럴 듯한 수사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책에 매달리지 말아야 합니다.

원인과 결과, 목적과 수단을 엄격하게 제대로 구분하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경제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원인과 결과를 도치시키고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는 경제정책은 소중한 자원만 낭비하고 아무런 효과도 가져오지 못합니다. 오히려 경기 부진, 경제 파탄을 초래합니다.

정부에 정식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송언석 의원께서도 제안을 하시던데, 정치권과 정부, 전문가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경제난 원인규명 및 대책 마련 비상 원탁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타임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주영** 유성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노원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고용

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주영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출신 고용진 의원입니다.

지난해 우리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세 바퀴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에도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여러 대내외적 요인으로 경제 상황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우리 서민들의 삶은 힘듭니다. 우리 경제의 현 상황을 제대로 분석하고 진단해야 올바른 경제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부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경제 상황 몇 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요새 일부 야당과 언론의 얘기만 들으면 한국 경제가 곧 망할 것 같은데요. 정말 그런지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지난해 4분기 한국 경제는 3.1%, 연간으로는 2.7%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예.

○**고용진 의원** OECD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서 이 정도의 성적이 정말로 참혹하거나 최악의 성적표인지 한번 냉정하게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작년 실적 2.7%만 놓고 본다면 OECD의 유사한 국가들과 비교해서 그다지 그렇게, 지금 그와 같은 평가를 받을 정도의 성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 굉장히 경제가 어려워서 정부로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혹시 정부가 경제 상황에 대해서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지적이 있을까 봐 저희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올해 경제가 엄중하다는 것은 정부에서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같이 말씀드립니다.

○**고용진 의원**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이지만 여러 경제지표가 조금씩 호전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소비자심리지수도 3개월 연속 나아지고 있고 2월 고용지표나 제조업 경기전망도 좀 나아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경제의 정확한 경기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직 경기저점을 찍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경기저점에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의원님, 경제국면에 대한 판단은 아무리 저희가 경제 당국이지만 그것은 통계청과 또 통계 전문위원들의 판단이 필요합니다만 저로서는 올해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져 둔화 국면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1월 달, 2월 달 최근 통계 지수를 보면 비록 수출이라든가 투자, 분배 문제가 어렵지만 소비자심리지수라든가 기업실사지수 그리고 1월 달 산업활동동향을 본다면 긍정적인 사인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것이 아직 구조적으로 추세적으로 안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고 있고 신중하게 보고 있으면서 또 긴장감 있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진 의원 야당과 보수 언론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이 소득분배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득주도성장 중에 최저임금이라든가 52시간 근무제 도입 이와 같은 것들이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빠르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일부 민감한 업종에 대해서는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직 최저임금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과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한국 경제가 지금 당면한 구조적인 요인이라든가 또 인구적인 측면이라든가 경기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어서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에 흡사 최저임금 때문에 지금과 같은 경제적 어려움이 갖다 하는 것은 저는 선뜻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고용진 의원 일반적으로 경제정책이 실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를 보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그렇습니다.

○고용진 의원 그래야 통계적 데이터가 축적이 되는 것인데 지금 그런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을 만큼 통계가, 데이터가 쌓여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정부로서도

찾아보려고 노력하지만 아직 그와 같은 데이터가 축적이 안 되어 있고요. 민간에서 분석하시는 분들도 제한된 분석 자료 가지고 그렇게 말씀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약간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용진 의원 경제는 심리라고 합니다. 경제학에 자기실현적 예언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예, 어떤 믿음이나 예언을 자꾸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발생하지도 않았을 일이 실제로 발생하는 현상을 말하고요. 경제학에서는 경제가 자꾸만 나쁘다, 나쁘다 하면 정말 심리적인 작동에 의해서 나빠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진 의원 저도 우리 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습지만 극단적인 경제 상황 진단과 분석에는 다시 한번 우려를 표합니다.

제조업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 출범 이후의 첫 화두가 제조업입니다.

부총리 첫 현장 일정도 자동차 부품업체 방문이었던데요. 이제 소득주도성장은 속도 조절을 하면서 혁신성장, 그중에 제조업에 방점을 찍고 간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예, 금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설정하면서 정부는 경제 활력을 찾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의원님 지적대로 제조업에 대한 경쟁력 그리고 경제 활력 제고에 최대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진 의원 화면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해 12월 산업부 업무보고 때 대통령 말씀이신데요.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산업정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 또 잘하는 분야를 계속 잘해가는 게 중요하다,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마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예.

○고용진 의원 대통령께서 산업정책의 방향을 제대로 잘 잡으셨다고 봅니다.

옛그제 국무회의에서도 주력 제조 분야의 고용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점이 우리 경제의 가장 어려운 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제조업 분야에 대한 진단을 좀 개괄적으

로 해 주시지요, 부총리.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의원님 아시다시피 주력 제조업종이 최근에 들어와서 경쟁력을 사실 좀 잃어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어서 정부로서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되찾고 제조업의 업종별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방안에 몰두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성장동력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신산업 육성도 필요하지만 주력 제조업에 대한 경쟁력 회복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용진 의원 주력 제조업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 조선하고 자동차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자동차, 선박……

○고용진 의원 부총리님, 현장을 그렇게 다녀오셨는데 다녀오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저희가 가기 전에도 상당히 예상을 했습니다만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는 것을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가면서 들은 내용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진 의원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활동하면서 그쪽에 종사하신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됐는데요. 정말 산업 생태계가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품업체들은 소위 단가 후려치기, 기술 탈취 등이 수시로 벌어지면서 줄도산하고 있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부총리, 금형 탈취, 서면 미교부 이런 말들 혹시 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예, 들어 본 바가 있습니다.

○고용진 의원 업황이 어려워지니까 그야말로 2차·3차에 있는 하청업체들은 초죽음 상태입니다.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은 우리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이 너무 낮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도록 정부는 무엇을 했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중국의 제조 2025 등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적어도 30개 국가에서 제조업 부흥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중요한 시간을 우물쭈물 흘려보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 박근혜정부 시절에 제조업 3.0이라는

게, 제조업 혁신 3.0이라는 전략이라는 게 만들어졌었는데 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예.

○고용진 의원 이 내용이 뭐고 어떻게 됐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제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제조업하고 IT를 접목·융합해서 새롭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자는 것이 제조업 3.0 전략이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제조업에 대한 구조적인 혁신을 이루어 나가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서 제대로 성과가 거양되지는 못했다고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고용진 의원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그 직후에 바로 최경환 부총리 체제가 들어서면서 빗내서 집 사라라는 부동산 경기 대책에 올인하면서, 부동산 경기 진작에 올인하면서 이런 부분들 정부가 제대로 추진 못 했다 이렇게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조업 혁신 3.0 전략 내용 자체가 갖는 한계도 있었고요. 현장에서 집행되는 것도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고요. 거기에 말씀 주신 대로 부동산 문제가 커지면서 사실 제조업에 대한 경쟁력 대책이 좀 어떻게 보면 관심 밖으로 밀려난 것도 굉장히 뼈아픈 것이 되겠습니다.

○고용진 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향후 3년이 우리 제조업 재도약의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국민들은 그런 것이 있었는지조차 모릅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도 소중한 시간을 많이 흘려보냈습니다.

부총리, 대통령께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만들라고 주문하셨는데 약 3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의원님, 제조업 업종별로 어려운 업종에 대한 경쟁력 강화 대책은 정부가 발표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해서 발표한 적은 작년 12월에 산업부가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했던 제조업 활력 제고 대책이 있었습니다만 대통령께서 12월 달에 말씀을 주신 이후에 정부가 관계부처 TF를 구성해서 2030년을 목표로 하는 소위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지금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030년까지의 제조업에 대한 비전, 전

망 이것을 분석하고 핵심 업종별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담고 있는데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어느 정도 검토가 진행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고용진 의원** 대략 언제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저희가 아마 정부로서는 상반기 정도 예산을 하고 작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상반기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용진 의원** 그 내용 중에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내용이 핵심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고용진 의원** 자료를 좀 보실까요?

우리 정부가 지금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1년도 안 되어 스마트 공장 목표를 2만 개에서 3만 개로 늘렸습니다. 기초 수준의 스마트 공장만 계속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제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가장 또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가 이 스마트 팩토리라고 생각을 해서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3만 개를 목표로 해서 정부가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이제까지 한 4~5년간에 한 8000개 정도가 됐습니다만 정부가 작년부터 연간 4000개에서 6000개, 연간 한 5000개 정도 만들어 가는 걸로 굉장히 의욕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진 의원**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스마트 팩토리라고 그러면 자동화하고 디지털화 일부 하는 것만으론 이걸 턱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도화시키는 스마트 공장 전략이 있어야 될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실적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의원님, 아까 말씀한 대로 스마트 팩토리를 늘려 가면서 지금 그와 같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작년부터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고도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2022년까지 정부가 설정한 3만 개의 4분지 1 정도, 25% 정도는 이 고도화 사업을 적용시켜서 말 그대로 그냥 단순히 자동화, 전산화가 아니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그런 생산성 있는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어 가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도 작년도의 한 340억을 2배로, 한 750억으로 늘렸고 지원 단가도 50% 늘려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 지적하신, 우려하시는 대로 그냥 단순한 형태의 스마트 팩토리가 되지 않도록 정부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용진 의원** 유념하셔서 고도화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진 의원** 또 하나, 지금 민간투자 부진이 문제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예.

○**고용진 의원**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제조업 분야에 한해 R&D 세액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R&D 전반에 대해서 한시적 세액공제는 조금 너무 포괄적이고요. 저희는 해당되는 분야에 합리적으로 필요하다면 세제 지원할 준비가 언제든지 되어 있습니다.

○**고용진 의원** 좀 더 포괄적으로 넓히는 것 한번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진 의원** 부총리 들어가십시오.

이낙연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아닙니다.

○**고용진 의원**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의 거버넌스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마련이 시급합니다. 그러나 ‘급할수록 천천히’라는 말이 있듯이 차분하게 들여다보고 계획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조업 전략은 개방성과 수용성 그리고 지속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총리께서는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이 만들어진 과정을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어렵게 압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해서 제조업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ICT와 접목하는, 말하자면 4차 산업혁명에 본격 대비하기 위한 제조업 차원의 전략이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용진 의원**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 어떤 그룹들이 어떻게 참여했는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정부, 연구기관들, 기업, 노동자들이 망라해서 함께 참여했습니다.

○**고용진 의원** 좋습니다.

독일은 메르켈 총리 집권 이후에 다양한 세력들과 또 기업들, 집단들이 참여해 가지고 인더스트리 4.0을 완성하는 데 같이 기여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국무총리 이낙연** 우리가 몹시 취약한 것이 바로 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용진 의원** 독일처럼 우리도, 물론 민관이 함께 합니다만 산업계를 비롯한 기업들 그다음에 과학계, 이런 민간의 영역이 더 주도적으로 일하고 관이 그것을 돕는 거버넌스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정부 내에서 함께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다음 정부가 본격 이행을 떠맡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된 제도발전 전략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것이 앞으로 정부가 바뀌더라도 지속성을 갖는 정책이 되도록 거버넌스를 갖추는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용진 의원** 지멘스라든지 보쉬라든지 이런 초일류 팩토리, 공장을 구축하는 기업들이 또 우리하고 많이 연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쪽하고도 긴밀히 연계해서 많은 점을 벤치마킹 하 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독일뿐 아니라 미국 사례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ABO, 흔히 ABO라고 하지만 애니싱 벗 오바마(Anything But Obama)라고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고용진 의원** 트럼프 행정부에서 오바마케어를 비롯해서 오바마 행정부의 모든 정책을 폐기한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유일하게 가져가는 오바마의 정책이 바로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입니다. 공화, 민주 양당이 주요 정책을 놓고 극심한 대립과 분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만 국가발전 전략으로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은 수정·보완을 거듭하면서 일관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리, 우리도 최소 10년을 내다보는 제조업 르네상스 2030 전략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지난 박근혜 정권의 제조혁신 3.0 전략은 유아무야되었

고 스마트팩토리 추진도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습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산업 정책이 흔들려서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동감합니다. 정부 내에서 논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용진 의원** 일련 법적 근거를 두는 것도 고려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런다면 더 좋겠지요. 튼튼한 기반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의원** 끝으로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민생 문제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총리님, 실손보험 아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어떤 거요?

○**고용진 의원** 실손보험이라고 아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아, 예.

○**고용진 의원** 가입돼 있으신가요?

○**국무총리 이낙연**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고용진 의원** 아마 사모님이 가입을 해 놓으셨을지도 모르는……

○**국무총리 이낙연**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고용진 의원** 가입자 수가 3400만 명이 되니까요. 제2의 건강보험이라 할 만합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정액제 의료보험 빼놓고는 가입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만 하여튼 압니다.

○**고용진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3400만 명이 가입된 보험인데요. 이게 보험 청구절차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 들으셨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병원에 가서 뭘 떼어야 되고 다시 그것을 청구하고 전산화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분야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용진 의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액이어서 또 불편해서, 그래 가지고 보험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아주 허다합니다.

국민권익위가 제도개선 권고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변한 게 없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보고받은 것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작년 하반기부터 실무협의체가 가동되고 있습니다만 의료기관 쪽에 피해 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자료가 드러나는 것을, 아직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만 그쪽을 포함해서 서로 간에 동의가 얻

어져야 하는 단계입니다.

○**고용진 의원**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발도 우리가 이해는 합니다만 국민 편익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용진 의원** 특히 심사평가원, 심평원을 중심으로 이런 중계기관을 만들면 여러 가지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잘 검토해서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총리께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잘 알겠습니다.

○**고용진 의원** 총리님 들어가 주십시오.

○**국무총리 이낙연** 고맙습니다.

○**고용진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자국의 제조업을 살리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사례에게 보았듯이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은 좌와 우의 문제도 진보와 보수의 문제도 아닙니다. 최소한 10년 앞을 내다보며 2030 제조업 강국 도약을 위한 발전 전략을 수립해서 일관되게 추진해 보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와 20대 대한민국 국회는 제조업 도약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주영** 인사 좀 하고 가지지요.

○**고용진 의원** (단하에서)

처음이라……

○**부의장 이주영** 처음이세요?

고용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영주·문경·예천 출신의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교일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주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영주·문경·예천의 최교일 의원입니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실업자 수는 130만 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 작년 실업률은 17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청년 체감 실업률도 22.8%로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여 사상 최악의 실업난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동행지수와 선행지수는 50년 만에 최장기간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 격차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합계출산율은 사상 최저치이며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혼인 건수도 1000명당 5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앞다투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방 산업단지 가동률은 반토막 났고 공장 경매 물량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는 급감하고 있고 단기 알바 자리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경제를 지탱하던 수출마저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폐허 속에서 재건한 대한민국이, 우리가 자랑하던 한강의 기적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민적 합의 없이 결정된 탈원전 정책과 4대강 보 파괴는 새로운 사회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렇게 엄중한데도 정부 여당은 장기집권 계획 아래 선거법과 공수처법 통과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대통령제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나라는 남미의 볼리비아밖에 없고 공수처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만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가 경제와 민생을 위해 전념할 것을 촉구합니다.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화면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것처럼 최근 5년간 1만 6500개의 기업이 해외로 이전했습니다. 중소기업이 1만 3700개이고 대기업이 2800개입니다. 수출입은행 자료입니다.

최근 SK이노베이션은 미국 조지아주에서 배터리 공장 기공식을 열었고, LG전자 테네시주, 한화큐셀 조지아주, 삼성전자 사우스캐롤라이나, 한국타이어 테네시 공장 등 해외 공장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해외 공장에서 고용한 인원은 수백만에 이를 것입니다. 반면 국내로 유턴한 기업은 중소기업 50개에 불과합니다. KBS 보도에 의하면 지방산업단지 가동률은 울산의 경우 83.1%에서 33%로, 광양은 75.3%에서 36.2%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역시 KBS 보도에 의하면 공장 경매물량은 최근 4년 동안 2배 이상 급증하고 있습

니다.

그야말로 처참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잘못된 정책기조하에 기업을 좌악시하고 기업 여건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외국으로 나가는 것 아닌가요? 부총리님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의원님, 표는 잘 봤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이 일어난 것이 저는 최저임금에 따른 임금 압박 요인도 없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제적으로 우리 경제가 처한 현 상황을 다 집약해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최교일 의원 그렇지요, 우리나라에서 기업 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그렇습니다.

○최교일 의원 그래서 기업 해외 이전을 막고 유턴을 시켜야 되는데 어떤 정부의 정책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50여 개 남짓 기업만이 유턴기업으로 지금 인정을 받아서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정부로서도 국내에서 일 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이 다시 국내로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보고 작년 11월 달에 유턴기업 대책을 별도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대상 범위도 대기업으로 넓히고 세액공제 범위도 넓히고 재정지원 규모도 키워서 유턴기업을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정책의 중요한 포인트의 하나로 설정하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교일 의원 좀 더 많은 혜택을 주더라도 파격적인 유턴 정책을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예, 그렇게……

○최교일 의원 표에서 보셨지만 지방산단 가동률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원인은 무엇이며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경기가 여러 가지 어려워지면서 산단 가동률이 같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로서는 일단 민간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측면적으로 산단에 있는 기업들이 마음껏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적인, 금

융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산단에서 기업 활동하는 것이 좀 원활하도록 산단 자체를 고도화하는 작업에 대해서도 정부가 특별히 신경을 쓰고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교일 의원 경제는 심리라고 하는데 기업이 심리적으로 기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우리나라는 GDP 대비 수출 비중이 34.6%입니다.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만큼 수출이 경제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비중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2017년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50.7%, 2018년에는 42.9%,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 현황을 보면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3/4분기부터 수출이 계속 내리막입니다. 3월 달 또 떨어졌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경기지수는 역대 최장 기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부총리님, 수출 감소 원인은 무엇이며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의원님 아시다시피 12월부터 1~2월까지 수출이 마이너스를 시현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수출의 거의 한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의 가격·물량의 조정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격도 굉장히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가파른 폭으로 떨어지고 해서 정부로서는 마이너스되는 수출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난 2월 말에 수출활력 회복대책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전제적으로 수출기업들이 어려움을 갖고 있는 무역금융 활성화를 포함해서 새로운 신시장 개척,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새로운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만들어 시행해 나가고 있고요. 특히 수출 주력 업종별로 맞춤형으로 저희가 업종별 수출대책을 강구해 나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교일 의원 반도체만 바라보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수출 증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교일 의원 그리고 일자리가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60대 이상 단기일자리가 39만 명 늘어났

고, 경제의 중추인 삼사십대 일자리는 24만 명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주당 35시간 이하 단기일자리는 87만 명이나 늘어났지만 36시간 이상의 제대로 된 일자리는 80만 개가 감소했습니다.

또 다음 표 보시면 세금으로 만드는 사회복지 서비스업 일자리는 20만 개 늘어났지만 경제 핵심 업종인 제조업과 도소매업은 22만 개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실업자 수는 130만 명으로 2000년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일자리 감소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오늘 조선일보를 보면 고용부에서도 최저임금이 고용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것을 처음으로 인정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 또 조선일보 보면 서울대 교수팀은 일자리 감소분을 6만 개로 봤는데 홍장표 위원장님은 일자리 감소가 3만~4만 개 정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부총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의원님, 일자리 관련해서는 고용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제가 경제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정부로서도 일자리 늘리는 데 정책의 가장 큰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의원님이 말씀 주셨던 최저임금 영향에 관해서는,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은 업종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업종이 있는데요 이 최저임금 관련해서 민감한 업종에 대해서는 또 일정 부분 저는 영향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가 다른 분야에서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일자리가 개선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최교일 의원 그래서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된다, 3년간 동결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동결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의원님, 아시다시피 최저임금은 정부가 결정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요. 저희로서는 앞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될 때 여러 가지 경제 상황, 노동 상황이 같이 합리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하는 안을 국회에다 제출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교일 의원 부총리님 어제 문화일보 사진을 보면, 청와대 보고가 있었지요? 환하게 웃고 계신데 그때 주된 보고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가장 큰 보고가 지금 의원님께도 말씀드렸던 우리 경제 상황 전반에 대한 보고가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가 끝난 이후에 내년도 예산편성에 관한 지침이라든가 예타 제도의 개선이라든가 규제 완화 작업이라든가 이런 경제 현안들에 대해서 폭넓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교일 의원 언론에서는 경제의 긍정적 신호다 이렇게 보고를 했고, 이에 대해서 안이한 인식이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그런 보도 자체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정부가 어저께 대통령께 그렇게 안이한 인식으로 보고드린 바도 없고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고, 정부로서는 우리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고 엄중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그래도 긍정적인 신호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경제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그와 같은 긍정적 모멘텀이 추세적으로 잘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곧 경제 상황에 대한 안이한 인식이라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그 보도, 일부 매체의 보도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유감의 표시도 같이 전달을 했습니다. 정부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교일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소득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예.

○최교일 의원 지난 4분기 정말 엄청나게 하락을 했지요? 그런데 그때의 경제성장률은 3.1%로 작년 중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주도성장의 기본 개념이 저소득층 소득이 늘어나야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예.

○최교일 의원 반대로 저소득층 소득이 저렇게 줄었으면 경제의 성장이 하락해야 되는데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소득주도성장 이론이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 주는 것 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1분위 계층의

근로소득이 줄어들었는데 사실 시장에 계신 분들의 근로소득은 늘었습니다. 가장 뼈아픈 것은 1분위에 아까 총리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70세 이상 가구주가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노동 시장에서 좀 벗어나 있는, 혹은 밀려나 있는 그런 분들에 의한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와 같은 고령층에 대한 일자리 대책, 정부재정 일자리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고령층에 대한 민간에서의 좋은 일자리들이 만들어지는 데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교일 의원 그러니까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어나고 성장이 되는 겁니다. 고소득층이든 저소득층이든 전체로 봐야지 저소득층 소득 증대만이 성장을 시킨다, 고소득층은 소득이 늘어도 더 이상 소비를 안 한다 그것 기본 전체가 잘못된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저는 고소득층도 소득이 늘고 저소득층도 소득이 늘는 가운데 5분위 배율이 줄어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교일 의원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예.

○최교일 의원 그리고 조종사 훈련소가 우리나라에 없는 것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예.

○최교일 의원 그것 지금 베트남에 만들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의원님 지난번에 지적해 주셔서 가지고 조종사 인력 훈련소가 해외로 빠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우려감을 갖고 지켜봤고요. 항공산업이 앞으로 굉장히 유망한 산업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산업부하고 각별히 협력해서 대책을 세워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교일 의원 베트남에 만들지 말고 한국에 만드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베트남 건은 의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저희도 계속 팔로우업을 해 왔었습니다.

○최교일 의원 다음, 농림부장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쌀 직불금에 관해서 논과 밭의 직불금 차이가 두 배 정도 나는 것 그리고 면적 단위로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최교일 의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우선 직불금의 취지가 농업의 환경보전적 기능에 대한 보상 또 농촌 소득이 낮은 것에 대한 보전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다 보니까 논 중심의 지급 구조를 지금 불가피하게 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방금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신 대로 논 직불금은 헥타르당 한 100만 원 지급을 하고 있고요, 고정직불금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밭은 55만 원, 매년 5만 원씩 70만 원까지 앞으로 높여 갈 계획입니다만.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작목이 논과 밭의 구분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콩을 논에다 심으면 헥타르당 100만 원의 고정직불금을 받고 밭에다 심으면 55만 원을 받는 이런 모순된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통합해서 일률 지급을 하는 방향으로 현재 지급 직불금 지급 구조를 개편 중에 있습니다.

○최교일 의원 좋은 대책을 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예.

○최교일 의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총리님.

총리님, 19일 이틀 전 하루 동안 기재부, 국토부, 외교부 등 20개 부처·기관이 하루 만에 청와대에 신년 업무보고를 했다는데 맞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아시는 것처럼 개각 부처는 작년에 이미 대통령께서 대면 보고를 받으셨고요, 개각이 안 된 부처는 서면 보고로 대체를 했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고 제가 또 종합적으로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표는 분야별로 나눠서 시차를 두고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최교일 의원 개각 여부를 떠나서 신문에서는 '무성의가 도를 넘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기사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봤습니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을 인지합니다만 과거에도 서면 대체가 더러는 있었지요. 또 대면 보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업무계획의 상당 부분은 서면으로 대체를 합니다.

○최교일 의원 총리께서 보고하시는 데 시간은

총 어느 정도 걸렸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한 이삼십 분 걸렸습니다. 주로……

○최교일 의원 20개 부처 기관들……

○국무총리 이낙연 전체적인 흐름이요 작년 예산안 편성 때 논의했던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계속적인 것이고요. 큰 특징을 설명드리고 또 저희가 역점을 두어서 해야 할 20여 개 사업들 그 내용과 제목—내용은 다 알고 계시니까요—그 것을 했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현장을 많이 다니겠습니다’ 하는 등등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최교일 의원 저도 공무원으로 근무했습니까마는 김대중·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직접 업무보고 준비를 하고 업무보고를 드렸는데 그게 굉장히 큰 업무이고 중요한 행사거든요. 그때 다 12월, 1월에 했습니다. 3월에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 도 좀 늦다고 생각하고 국민들께서 너무 성의가 없는 것 아니냐,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질 수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아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면 보고가 이루어진 것은 2월이었고요 그 발표는 3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최교일 의원 하여튼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구요.

제가 저출산 문제 늘 말씀드리는데 지금 혼인율이 80년에 비해서 반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더 저출산이 되겠지요. 그리고 전 세계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던 것, 한 1000만 원씩 출산장려금 주는 문제 꼭 해결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총리님?

○국무총리 이낙연 작년 예결위에서도 존경하는 최고일 의원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도 머릿속에 혹시 그렇게 하면 나아질까 하는 것이 뇌리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논의해 보겠습니다.

○최교일 의원 사실 마지막 남은 대책입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교일 의원 그리고 미세먼지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첫째 대책이 석탄 발전을 줄이는 것이었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과거를 타하는 것은 아닌데요 이전 정부에서 11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인허가가 완료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노후 화력발전소 4개를 중지시켰고요. 또 초미세먼지 비상조치가 취해질 때는 발전 가동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정책은 에너지 정책도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마는 산업 정책이 있을 거고요 건설 또는 다른 해운 포함해서요,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세먼지가 덜 나게 하는 산업 형태로 바뀌어야 될 것이고 에너지가 있고 국제 공조가 있고 국민의 동참이라는 요소가 있을 겁니다. 국민의 동참은 이 자리를 빌려서 외람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국민이, 저 자신이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동참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국회에서 미세먼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을 통과시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 법에 따라서 새롭게 가능하게 된 조치들이 있으니까요 면밀히 준비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교일 의원 어쨌든 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첫 번째 정책이 석탄 발전 축소였는데 석탄 발전이 늘어났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전 정부 핑계 대는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이미 인허가가 된 게 11개가 있습니다.

(「복원전 해, 복원전」 하는 의원 있음)

아니, 그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노후 화력발전소부터 줄여 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최교일 의원 그 첫 번째 약속은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영 부의장, 주승용 부의장과 사회교대)

○최교일 의원 일자리를 늘리는 것 그리고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 그 정책 방향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정책들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올바른 정책으로 소득 격차, 일자리 늘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주승용 최고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김삼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화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승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입니다.

요즘 대한민국 어디를 둘러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 달러에 진입했습니다.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30-50클럽에 진입했지만 국민들은 선진국으로 간다는 것을 전혀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에 맘 놓고 숨도 쉴 수 없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경기침체로 기업이나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이나 모든 국민의 하루하루가 힘겹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도 심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 맞아 경쟁국들은 신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규제 개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요원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경제성장 엔진마저 점점 꺼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호가 위기입니다. 우리 사회 갈등을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할 국민들의 공감대가 필요할 때입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합치면 29%가량 될 겁니다.

○김삼화 의원 아까 총리께서도 소상공인연합회 만났고 그리고 최저임금이 올라서 힘들다는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요.

○국무총리 이낙연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이 다 최저임금과 연관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최저임금을 지급하기에 힘겨워 하는 분야가 있을 것이고요 그런 업종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인상 때문에 직업 전선에서 배제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최저임금 탓이라고 보는 것은 좀 지나치고요. 예를 들면 조선업이 요즘 회복되고 있습니다만 조선업이 나빠진 것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전이었지요. 모든 것이 최저임금 탓이라면 지금 더 나빠졌어야 할 텐데 오히려 지금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야에 따라서 최저임금의 영향이 있는 곳도 있고 좋은 영향을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임금 근로자들은 좋은 영향을 받지요. 그것을 분간해서 보고, 그 대신에 설령 그게 좋은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 국민들께는 정부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김삼화 의원 총리께서도 중소기업 같은 산업 현장도 방문을 하셨을 텐데요. 저도 소상공인연합회나 중기중앙회, 경총, 무역협회, 상공회의소 같은 단체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그 단체들에서 항상 나오는 말이 ‘최저임금이 너무 급격하게 올라서 힘들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역설 아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김삼화 의원 바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올린 최저임금이 오히려 그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까 총리께서도 금방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어려워진 분들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국민들께서 잘 받아들이시기 어렵겠지만 최저임금은 정부가 바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합니다.

○김삼화 의원 물론 당연히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하는데……

○국무총리 이낙연 잠깐만요 그런데요 정부가 숫자를 제시한다는 것은 어긋나고요. 법에 어긋나고, 그 대신에 최저임금의 결정 체계가 마음에 놓이지 않는다 해서 결정 체계를 개편하는 안을 국회에 내놓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좋게 처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삼화 의원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맨 먼저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발의를 했는데요.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이 평소의 7%보다 두 배 가까이 또 그 이상 오르게 된 것은 정부의 의지가 그만큼 반영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최저임금의 인상에 대해서 이제 숨 고르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최저임금이 이렇게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것을 최저임금위원회도 충분히 인지하리라 생각합니다.

○김삼화 의원 총리께서는 깨끗하고 안전하고 또 경제적인 에너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장단점이 있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맹렬하게 높여 가고……

○**김삼화 의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깨끗하고 안전하고 경제적인 에너지가 있는냐고 물어봤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장단점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있을지요?

○**김삼화 의원** 저는 아직까지 그런 에너지는 없다고 보는데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아까 ‘탈원전 정책’ 그 용어가 좀 불편하다고는 얘기하셨는데 그대로 쓰겠습니다. 탈원전 정책이 미세먼지에 영향을 줬는지를 놓고 논란이 뜨거운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김삼화 의원** 화면을 한번 보여 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원자력 기준으로 천연가스는 54배, 석탄은 99배의 탄소를 배출합니다. 또 풍력이나 태양광보다도 원자력이 온실가스 배출이 적고요.

다음 장 넘겨 주시겠어요?

탈원전 국가인 독일도 재생에너지를 늘리면서 석탄·갈탄발전도 함께 늘어나서 온실가스 배출이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미세먼지 대책으로는 원자력이 어떤 에너지보다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전력 생산에서 원자력하고 석탄이 담당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원자력이 약 40% 좀 넘습니까? 석탄도 그 엇비슷한 것 같고요.

○**김삼화 의원** 예, 2개 합해서 70%가 넘는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원전 가동률도 80%에서 60%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보면 발전단가가 LNG는 원자력의 한 두 배 정도 또 신·재생은 세 배 정도 비싼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아까 원전 가동률 저하를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에너지 전환 정책이 아니라 원전 안전 정책이었습니다. 부실공사에 따른 안전 문제가 제기돼서 정비가 필요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김삼화 의원** 예, 어쨌든요.

표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2016년에 7조 1483억 흑자를 내던 한전이 지난해에 적자로 전환돼서 1조 1745억 원 당기순손실을 냈습니다. 올해는 아마 더 큰 적자가 예상되고요.

역시 2016년에 2조 4548억 흑자를 냈던 한수원, 지난해 1376억 원 당기순손실을 냈습니다.

지금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기존 석탄발전소를 미세먼지를 덜 배출하는 LNG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김삼화 의원** 그런데 석탄을 LNG로 바꾸면 비용이 증가되지 않나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급격하게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요, 우선 노후 석탄발전소부터 줄여 나가는 그런……

○**김삼화 의원** 예, 지금 정부가 원전 비중도 줄이고 석탄도 비중을 줄이고 탈원전·탈석탄 동시에 가면 전기요금 올리지 않고 가능합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런 걸 감안했을 때도 최소한 2022년까지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거의 없다 하고 저희들이 발표한 바가 있고요……

○**김삼화 의원** 예, 2022년 이후에 우리나라는 존속하지 않나요? 항상 정부는 2022년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무총리 이낙연** 그 뒤로도 2030년까지 에너지 전환 때문에 생기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제 기억이 맞다면 10.9% 정도였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삼화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학자들의 의견은 또 다른 것 같습니다.

탈원전이나 탈석탄,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쓰려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알리고 국민들이 그 부분을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지 공론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몇 년 동안은 그런 인상 요인이 없고요, 그 뒤로도 급격한 인상 요인은 없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삼화 의원** 공론화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건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김삼화 의원** 그리고 아까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지난 대선에서 공약이었고 공론화 절차를 거쳤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김삼화 의원** 그 공론화 절차라는 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5·6호기에 대해서만 결론을 낸 것이 아니라 다른 원전에 대해서도 결론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5·6호기는 공사를 재개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다른 신규 원전은 건설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이었습니다.

○**김삼화 의원** 예, 들어가시고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께서 2017년에 국무조정실장으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지원 업무 담당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김삼화 의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 목적이 뭔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공사를 계속할지 중단할지 여부를 공론화위원회에서 일단 조사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삼화 의원** 신고리 5·6호기에 시민참여단이 471명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500명 중에서 471명이 참가했습니다.

○**김삼화 의원** 예, 2박3일 동안 토론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예.

○**김삼화 의원** 그때 신고리 5·6호기하고 관련이 없는 원전 축소 선택 비율이 53.2%였는데,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삼화 의원** 이것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서, 아까 총리님께서 거기에서 공론화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때 구성 목적과도 다르게 원전 축소 선택 비율을 물으면서 그것에 대한 답변이 53.2%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답변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계속 공론화를 했다고 얘기하는데요.

하나, 당시에 장관이었던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국감에서 '탈원전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활동은 별개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공론화가 주목적이었고요. 그러나 공론화위원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하면서 그 내용에 신고리 5·6호기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전환 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설문에 들어가 있어서 같이 내용을 분석해서 저희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화 의원** 그럼 구성 목적을 벗어난 일어난 거지요.

들어가지기 바랍니다.

총리께서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탈원전 정책이 전문가나 국민들 의견 충분히 반영돼서 결정됐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선거에서 네 분이 공약했을 정도로 원전 의존도의 단계적 완화는 그 당시에는 거의 사회적 절대 다수의 소망이었던 것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절차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론화위원회가 그런 결론을 내 준 바가 있습니다.

○**김삼화 의원**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범위를 넘어간 것이고요. 대통령 공약이라도 이것 때문에 지금 국민적 갈등이 굉장히 심한데 필요하다면 수정을 할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요.

다른 나라는 어떻게 했는지 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탈원전을 선언한 나라들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나라만 정부가 결정했지 스위스, 대만, 이태리는 국민투표를 했고요. 일본은 탈원전을 했다가 다시 지금은 정책을 폐기했습니다.

또 다음 넘겨 주시겠어요?

탈원전 정책을 결정한 나라들의 기간을 한번 보시면 독일은 1986년에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에 시작해서 거의 30년, 또 스위스도 38년 동안 여섯 번이나 국민투표를 거쳤습니다. 대만도 상당히 오랜 기간 했고요, 이태리도 24년이 걸렸고요. 대만은 아시다시피 탈원전에 대해서 국민투표로 다시 원전을 가동하는 것으로 했고요.

지금 탈원전 국가 중에서 스웨덴, 일본, 대만이 다시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는데 그 이유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대만의 경우는 국민투표를 거쳐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화 의원** 그 세 나라가 폐기를 왜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앞에 무슨 수식이 좀 복잡하게 붙었었습니다. 뭐, 뭐, 뭐 하는 식으로요. 그건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김삼화 의원** 결국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면서 요금도 인상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달성이 어려워지고 이러면서 탈원전 정책이 폐기된 겁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그 투표에 올린 안건 자체가 문안이 좀 복잡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삼화 의원** 지금 그건 대만 얘기인 것 같고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김삼화 의원** 총리께서 지난 3월 12일에 방영된 KBS의 ‘탈원전의 두 가지 시선’, 혹시 그 프로그램 보셨나요?

○**국무총리 이낙연** 이 프로그램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삼화 의원** 그러셨습니까? 한번 좀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이 있어서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사회 모두가 참여하는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다. 그것만이 에너지 문제로 지난 2년간 빚어 온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탈원전 정책을 둘러싸고 굉장히 사회적 갈등이 심각합니다. 정부가 ‘이 부분은 대선 공약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정말로 범사회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공론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희 바른미래당에서 제안했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기구,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김삼화 의원** 그런 것처럼 국민적인 갈등이나 이런 게 심각한 것은 충분히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서 공론화를 더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471명 모여서 2박3일 토론했고 그것을 ‘탈원전에 대해서 공론화를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2박3일이 전체 기간은 아니었고요 그 전부터 전체 기간을 합치면 훨씬 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신 말씀, 고려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느 쪽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세먼지에 관해서 손학규 대표께서 정말 경륜이 묻어나는 큰 제안을 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삼화 의원** 지금 국민적인 갈등이 이렇게 큰 것은 정부가 그 갈등을 불식시키고 좀 통합을 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 잠깐 들어가 주시겠습니까.

부총리 잠깐 나와 주십시오.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경유차 관련해서 경유세 인상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유차는 자영업자들, 소형 화물차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생계수단이다, 그래서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별로 없고 오히려 서민의 부담만 증가시킬 거다 하는 그런 반론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저희도 그런 얘기를 들어 왔고 의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저희도 똑같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유세 인상 문제는 단순히 미세먼지 차원뿐만이 아니고 그와 같이 경유차를 활용하고 있는 서민, 중산층에 대한 배려라든가 미세먼지 저감효과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서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삼화 의원** 예, 들어가십시오.

총리님 잠깐만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저출산·고령화 때문에 우리나라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다 하는 그런 우려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여성들의 고용률을 남성 수준까지 올리면 안정적으로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전망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해서 특히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또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여성 창업 또 여성 취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 지원 정책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공공기관부터 여성의 대표성 강화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엇그저께 나온 통계를 보면 공공부문은 목표를 초과달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간부문에 훨씬 더 광범하게 퍼졌으면 좋겠고요.

조금 시간을 주신다면 출산율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일정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서 출산장려정책이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곳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해남이 한 때는 2.67명까지 갔다가 지금은 2.34명 이런 수준이어서 대단히 성공적인 편이고요.

또 하나가 세종시입니다. 1.8명 정도입니다. 해남의 경우는 상상 가능한 모든 지원책을 다 쏟아 부은 것이고요. 세종은 특별한 지원책이 없지만 여성들이 안정적 직업을 갖고 계신다거나 또는 남편 되는 분이 안정적 직업을 갖고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하는 공무원, 교원이 많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추구해 가야 될 방향은 세종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들께서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출산하고 보육, 아이를 키우고 돌아와도 내자리가 그대로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 더 욕심을 낸다면 경력단절 자체가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 이렇게 하는 사회가 출산장려정책에도 도움이 되고 여성들의 삶의 질, 사회적 지위, 권익의 향상에도 도움이 될 거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삼화 의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감사합니다.

○**김삼화 의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주승용** 김삼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성남 분당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관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성남 분당갑 출신 김병관 의원입니다.

우리 경제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진입했지만 또 한편 경제에 어두운 측면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당을 비롯한 보수 진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취약계층의 소득과 분배지표가 더욱 악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면밀하고 냉철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경제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경제와 관련해서 아픈 통계치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지금 화면을 보시면 독일, 프랑스, 일본이 3만 달러 시대에 진입할 당시와 현재 대한민국을 비교해 보면 현재 우리 대한민국 경제지표가 상당히 양호하고 또 국민들의 삶의 질 지표도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총리님,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거시경제 지표가 양호함에도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그리고 삶이 팍팍하다고 느끼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혹시 정부가 이에 대해서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예, 의원님. 지난 소득격차가 벌어진 이유는 저희가 볼 때는 가장 큰 것은 어차피 고용부진이 가장 컸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기가 어려워면서 고용부진이 가장 컸고 또 인구구조적 측면에서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된 것도 이와 같은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과당경쟁이든가 업황 부진에 의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속화된 것들이 정부가 이전소득을 확대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런 효과가 너무 커서 소득분배가 악화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분배의 개선을 위해서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김병관 의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서 앞으로도 우리 소득 1분위 내에서 노인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높아질 것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선진국들의 경우는 공적이전을 통한 재분배를 통해서 소득불균형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역사가 매우 짧은 관계로 인해서 이게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소득에 대해서 의존도가 높은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또 아시다시피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을 대한민국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지 않으면 저는 앞으로도 소득불평등은 해결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 좀 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예, 정부도 지금 의원님 인식에 정확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 제공이라든가 또는 노후보장 체계를 좀 강화하는 측면에 대해서 최

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병관 의원**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연령이나 가구원 수에 따라서 지출 차이가 크고 또 소비패턴도 많이 다릅니다. 또 그에 따라서 경제에 대해서 체감하는 바도 많이 다른데요. OECD에서도 연령대별 소득지표 또 불평등과 빈곤 이런 다양한 지표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구조적 요인 등을 고려해서 좀 더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경제지표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경제지표와는 또 다른 어떤 행복지표 같은 그런 지표들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좀 더 고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통계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계지표를 보강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1인 가구에 대한 통계를 좀 보강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회·국민복지 지표들, 삶의 지수들을 좀 반영해서 지표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장관님은 우리나라하고 미국의 창업자 연령 평균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김병관 의원** 미국의 경우에 창업자 평균 나이는 42세, 또 성공한 창업자 평균 나이는 47세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40대가 가장 많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에서 30세 미만의 창업자 비율은 10% 미만입니다. 장관님은 40대 창업 비율이 왜 이렇게 높고 또 성공한 창업자 연령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저희가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여러 개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개 청년들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창업을 해도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세 번의 실패를 겪고 나면 또 기술 축적도 되고 여러 가지 정보도 얻고 해서 대개 40대에서 이렇게 다시 창업을 하게 되면 성공률이 상당히 높은 걸로 현장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병관 의원**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기업가정신을 심어 주고 또 창업의 경험을 하도록 만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우리 대학과 청년들에게 창업을 지나치게 강요하고 있지 않나 저는 반성해 봅니다. 각 부처마다 대학 내 창업조직이 있고요. 또 대학에서는 각종 창업 관련 학사제도도 운영 중입니다. 또 심지어 창업동아리 수가 대학 평가의 지표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청년실업에 대한 대책, 다른 이유가 아니고 청년실업에 대한 대책으로 사실은 청년 창업, 대학생 창업이 권장되기 시작했습니다. 박근혜정부에서도 그 기조가 이어졌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 기조가 관성적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사회적 안전망이 그렇게 튼튼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 청년들이나 대학생들에게 창업을 밀어내듯이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국가가 우리 청년들에게 죄를 짓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을 포함한 국무위원들께서 이 부분은 꼭 염두에 두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의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의하는 바가 있는데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청년들이 창업에 관한 정보가 너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민간에서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정부에서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초기 창업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는 거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걸 제가 이렇게 들어 보면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특히 사오십 대 중장년층은 지금 정부의 창업 정책이 너무 청년에 집중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청년 전용 창업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나서는 현재 가장 많이 수혜를 받는 것은 중장년층이 실제로 많이 수혜를 받고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성공 확률도 중장년층이 더 높은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청년층은 경험이 없는 초보자이기 때문에 정부가 떡잎을 보호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지원을 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관 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창업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이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적 안전망이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이 안전망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런 경험이 없는 청년들이 이 창업 전선에 뛰어드는 데 저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중의 하나가 제가 많이 말씀드리지만 연대보증 금지 내용입니다. 장관님이 잘 아시겠지만 창업하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창업에 실패하면 현재 연대보증으로 인해서 신용불량자가 되고 다시 재기하기가 어려워지는, 불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국정과제로 작년 4월부터 연대보증을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2월 달에 감사원이 발표한 중소기업 보증업무 지원실태 감사보고서를 보면 연대보증이 버젓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아무래도 정책금융기관에서는 잘 지켜지고 있는데요 민간까지 이게 확산되기에는 아직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고요. 정책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지금 저희가 신규대출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했고요. 그리고 저희 정부 들어서서 저희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성과 중의 하나가 지금 기준에 있는 대출까지 만기가 돌아오게 되면 새로 평가를 해서, 그래서 상당 부분 연대보증을 해소하는 이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성과가 훨씬 더 많이 날 거라고 지금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김병관 의원 제가 좀 전에 보여 드린 자료는 작년 4월 이후에 기보와 신보에서 연대보증을 진행했던 사안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인 사업자 연대보증 폐지가 정부 국정과제인데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연대보증을 법으로 금지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경제 발전 과정에서 빚보증으로 인해서 전 재산을 잃고 또 파산한 이런 사례들을 많이 봐 왔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2012년에 은행권 그리고 2013년에 제2금융권에서 개인보증, 개인 간 연대보증을 폐지했습니다.

그 당시에 도덕적 해이나 또 사고율 급증을

우려하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아직까지 저는 사고율이 올라갔다는 얘기를 들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금융기관들이 대출 심사를 엄격히 하고 또 개인 신용평가 시스템을 개선하면서 우리나라 개인 대출 사고율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여 드리는 자료는 최근에 기술보증기금의 사고율입니다. 기술보증기금은 2016년부터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16년 이후에도 사고율이 높아지지 않고 있음을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에서 성실 실패자 일부를 구제해서 재기 지원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일부 실패자를 구제해서 재기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대보증에 대한 법적, 법률로 금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조금 더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아마 아까 말씀하신 그것은, 저희가 기존 연대보증 폐지를 시작했는데 그 이전 데이터들이 들어간 것 같고요. 저희는 계획에 의해서 2022년까지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은 다 해소를 하려고 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재기 지원을 하는 것이 최고의 창업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마음 놓고 창업을 하고 실패하면 두 번 세 번 창업할 수 있도록,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장에서도 기업들의 입장에서 저희 정책에 대해서 가장 높이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연대보증 폐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또 한쪽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기 지원을 활발하게 하고 있어서요 저희 생각에는 이런 정책은 앞으로 더 열심히 저희가 할 겁니다.

○김병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토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도입된 10년 공공임대주택이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12만 호가 있고요. 올해부터 판교를 시작으로 해서 우선 분양이 시작됩니다.

제도 도입 당시보다 지금 집값이 3배 가까이 뛰어서 임차인들이 거리에 내쫓길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사회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분양 전환가 기준을 변경하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3개가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안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직접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로펌에 법률 자문을 구했고 그 결과를 보면 건설사의 신뢰이익보다 공익 실현이 우선하기 때문에 위헌 요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현행법이 평등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국토부에 이 로펌 자문 결과를 보내 드렸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보고는 받았습시다.

○김병관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주민 측에서는 ‘사업자의 신뢰이익보다 공익이 우선하므로 위헌의 요소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고요. 저희 정부에서 마련한 법안에 대해서 법제처에 저희가 검토 의견을 자문했었는데요. 법제처에서는 ‘공익성의 문제라든가 사업자에 대한 신뢰의 보호 그리고 최소성의 원칙에 입각해 봤을 때 정부의 법안에 위헌 요소가 없다’, ‘그래서 사업자의 재산권을 소급해서 침해하는 등의 우려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위헌이다’ 이런 답을 주셨습시다.

○김병관 의원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조금 더,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게 위헌 여부가 덜하다고 생각하면 정부가 법 개정에 반대하지는 않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정부는 정부로서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집값이 상승한 지역도 있지만 집값이 하락한 지역도 있고요. 또 이미 처음에 당초의 계약대로 분양을 받으신 분도 다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형평성을 고려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병관 의원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제출한 법안에 대해서 공공임대 전국 62개 단지 8만여 명의 반대의견을 제출한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급등한 부동산 가격의 책임을 오롯이 임차인들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라는 공공적, 공익적 목적에 부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법률안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검토 그리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들은 지금 감정평가 할 때 원가법까지 적용해 달라는 요구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이후 국회 심의 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관 의원 감사합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평소 인터넷 전문은행 찬성론자로 알고 있습니다. 찬성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나요?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은산분리를 비롯한 금산분리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금산분리를 현실에서 만들어 가는 방법은 시대마다 나라마다 또는 업종마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에는 은행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대형 상업은행하고는 비즈니스 모델이 완전히 다른 금융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불특정 다수로부터 수신과 여신을 하는 금융회사는 많지만 그 모두를 은행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은행법으로 규율하지도 않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전문은행은 통상의 은행과는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별도의 법률 체계를 가지고 규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김병관 의원 벤처 업계나 대기업으로부터 민간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탈, 저희가 CVC라고 부르는데요 이 부분 허용에 대한 요구가 많은 걸 알고 계실 겁니다.

혹시 이런 요구가 왜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한국 경제의 현 단계에서 혁신을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모멘텀은 M&A에서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다른 한편, 위협에 도전하는 젊은이들에게는 그런 도전에 대한 성공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계기가 바로 M&A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런 M&A를 활성화할 수 있는 장치들, 특히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수단들이 많지가 않았습시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이런 모험자

본 공급을 통해서 M&A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장치로써, 그거의 한 부분으로서 CVC에 대한 요구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관 의원** 저는 위원장님이 CVC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부에서 답변을 받아 보니까 CVC 대신에 벤처지주회사를 활용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시다.

벤처지주회사가 CVC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CVC를 활성화하자는 의원님의 취지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법안의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공정위를 비롯한 정부에서 이거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게 뭐냐면 CVC에 대한 규제가 주어지는 것은 일반 지주회사인 경우만 그렇고 지주회사가 아닌 다른 형태의 기업의 경우에는 지금도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주회사에 대한 다른 법률과의 효율적 개선 이런 부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이고.

또 하나가 지금 일반지주회사에서 CVC를 운영하고 있는 그룹이 딱 들인데 이 둘 다 지금 현행법에 위반되었기 때문에 시정조치의 유예기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법을 개정하게 된다면 법 위반 상태에 있는 대기업 집단에 대해서 특혜를 부여한다는 반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법안이 벤처지주회사와는 별개로 국회에서 심의될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병관 의원** 사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지금 지주회사 형태의 구조로 바뀌어 가고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일반 VC와 다르게 CVC는 재무적 투자뿐만이 아니고 전략적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위험에 투자하는 자본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벤처캐피털이나 모태펀드 위주로 되어 있는 우리 투자 환경에서는 이런 위험 투자나 전략적 투자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벤처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해서 CVC가 꼭 도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부의 좀 더 적극적인,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기존의 벤처캐피털 업계가 사실은 성공 끝 무렵에 와 있는데요. 바로 IPO 직전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체리피킹(cherry picking) 투자에만 집중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고 그 이전에 정말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했다고 하는 의원님의 지적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벤처기업들의 라이프 사이클 전체에 걸쳐서 모험자본을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데 그게 벤처지주회사가 됐든 CVC가 됐든 여러 가지 통로들을 많이 만들어서 활성화하는 데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관 의원**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주승용** 김병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 부평갑 출신의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섭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주승용 국회부의장 및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인천 부평갑의 정유섭 의원입니다.

작년 말 한일의원연맹 경제분과회의에서 한 일본 의원이 일본은 일자리는 많은데 젊은 청년이 모자라고 한국은 많은 청년들이 논다는데 MOU 맺어서 한국 청년들을 일본으로 보내 달라고 제안하더군요.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이런 소리나 듣는 지경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이는 모든 경제지표가 보여주듯이 경제가 파탄 조짐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총리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화면 내려 주시고요.

총리님 오늘 고생하셨고요.

○**국무총리 이낙연** 감사합니다.

○**정유섭 의원** 중복된 질문은, 안 하셔도 됩니다.

조금 전의 경제지표, 잘 아시는 지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정유섭 의원** 그저께 말이지요, 대통령께서 일자리는 늘었고 경제는 견실한 흐름이라고 국무회의에서 말씀하셨어요. 저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

금 정부의 인식이 그렇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 말씀 뒤에는 우리 경제가 부닥치고 있는 여러 어려움과 과제를 신랄하게 말씀 주시고 저희들에게 엄중한 질책을 주셨습니다.

○**정유섭 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작년에도 회견 때마다 가계소득 높아졌다, 청년 고용률은 사상 최고, 상용직은 늘어났다, 최저임금의 긍정효과는 90%다, 제조업이 좋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 이렇게 아주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경제 운용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지도자는 때로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유섭 의원** 제가 보는 통계하고 대통령이 보는 통계가 다르니까, 같은 통계청 통계인데?

○**국무총리 이낙연** 잠깐만요, 그러시고요.

상황은 엄중하게 보고 있고요. 저희들께도 엄한 꾸중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일본 보여 주셨는데요. 최근에 일본은 실질임금 감소가 드러났고 노동 통계가 조작돼서 큰 스캔들이 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정유섭 의원**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썸일 거예요, 김동연 부총리한테 물었어요. ‘경제 정책을 전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연말까지 기다리면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장하성 실장한테도 운영위 때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 성장통이고 연말까지 아니면 책임진다고 그러더니 한 분은 ‘제가 힘이 없다’고 나가고 한 분은 중국 대사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오늘 총리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부 정책 전환하실 생각 없습니까, 경제정책?

○**국무총리 이낙연** 예를 들면요, 가장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최저임금입니다마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바꾸겠습니다’라는 것 자체가 큰 수정이지요.

○**정유섭 의원** 제가 이따 부총리한테 최저임금 질문드릴 건데요. 지금 경제는 선한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과가 중요해요. 자영업자 문 닫고 중소기업은 다 나가고 청년들은 일자리 없다고 그러고, 이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저희들도 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종합적인 요인에 대해서 대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유섭 의원** 2007년에 골드만삭스가 2050년이

되면 대한민국이 세계 제2의 부국이 될 거라고 했어요. 그때 말씀한 것을 보면 2050년도 되면 한국이 9만 294달러, 일본은 6만 6800달러. 이렇게 되면 안중근 의사도 무덤에서 튀어나와서 춤추실 것 같아요. 이런 나라 돼야지요.

골드만삭스가 왜 이렇게 얘기했느냐?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이 그만큼 있다는 거예요. 국민들의 잠재력, 기업들의 잠재력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하나 빼고요, 정부만 빼고.

제가 문재인 정부 탓하는 게 아닙니다. 역대 정부 잘했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 잘해 주셔야 됩니다. 잘해 주시고 그래서 2050년에 우리가 세계 제2의 부국이 되면 이게 애국이지요. 그래서 정부가 잘해 달라는 거고요.

그런데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왜냐?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70년간 성장한 것은 세계를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봤어요. 지금 정부는 국내만 바라보고 과거를 보고 있어요. 이러면 국민 갈등과 분열이 돼 가지고 이게 앞으로 가겠습니까? 언제까지 국내로, 과거로 이것만 할 겁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수사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검찰이 하는 거고요. 검찰이 경제까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는 경제 부처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유섭 의원** 제가 좀 전에 일본 저기했는데, 그래도 저는 일본이 부러운데 안 부러우세요, 일본 경제? 미국 경제는 안 부러우세요?

○**국무총리 이낙연** 일본이 잘하는 것도 있지 않아요, 일본 같은……

○**정유섭 의원** 아니……

○**국무총리 이낙연** 잠깐만요.

일본 같은 선진국도 노동 통계의 조작이 뒤늦게 들통나 가지고 난리입니다. 모든 것을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유섭 의원** 아까 일본 의원 얘기했듯이 일본의 청년들은 지금 일자리 많아서 난리다, 그리고 미국도 완전고용 상태다, 이런 것이 잘못됐다고요?

○**국무총리 이낙연** 아닙니다. 일본은 우리의 베이비부머 세대에 해당되는 단카이 세대가 모두 은퇴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많이 비어 있는 그런 시기적인 특성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섭 의원** 그것은 참 총리님답지 않네요.

이낙연 총리님답지 않게 답변하시네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셔야지요. 일본 경제가 무슨 노동 통계가 잘못됐다고 그러세요?

○국무총리 이낙연 아니……

○정유섭 의원 그리고 무슨 단카이 세대 그것 얘기하지 마시고, 일본은 그렇게 실업률이 최하예요, 우리는 실업률 최고고.

○국무총리 이낙연 잠깐만요.

일본의 좋은 점을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의원님만은 못 하지만 나름대로 일본을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유섭 의원 일본 국민들의 75%가 뭐라고 그러냐면 ‘매일의 일상이 즐겁다, 현재 생활에 만족한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행복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아까 김병관 의원님 통계하고 저하고 다른데 행복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일본 기업의 분위기는 최고입니다. 뭐라 그러느냐, ‘국가가 우리 기업을 진짜 도와준다’.

그런데 우리 기업들은 정부가 괴롭힌다고 그래요. 그러면 경제가 되겠습니까?

어제 박용만 상공회의소 회장이 말씀하셨어요. ‘기업과 기업인이 마음대로 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 기득권을 제거하고 파격적 규제개혁을 해 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동감이고요. 국회도 규제개혁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유섭 의원 제가요, 지역구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젊은 친구가 나한테 오더니 ‘삼성이 친일 기업인데 해산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요.

삼성이 친일 기업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경제를 꼭 그런 관점으로 재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유섭 의원 재벌이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어요. 순기능도 보셔야지요. 저기 재벌 맨날 혼내 주러 다니는 공정거래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재벌이 순기능도 있어요.

그리고 하도 그냥 정부에서 반일 얘기하고 반재벌 얘기하니까 젊은 친구가 헛갈린 것 같아요. 보니까 반재벌하고 반일이 헛갈려 가지고 그걸 그냥 삼성을 친일 기업으로……

아니, 삼성이 지금 고용한 게 얼마나 세금을

얼마나 내는데 그 정도면 애국하는 거지요. 애플처럼 세금 도피처에다가 저기하고 외국에만 공장 세우지도 않잖아요, 국내에 그래도 공장을 늘리는 기업인데.

○국무총리 이낙연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한국 경제가 이만큼이나 발전한 데 대기업의 기여가 컸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물론 대기업도 개선해야 될 과제는 많이 안고 있습니다만 그건 그것이고 대기업의 기여는 기여대로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유섭 의원 제가 왜 정부의 반기업 정책이라고 하느냐 하면요, 지난 1년 동안 30대 기업이 압수수색 안 당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이게 정상적인 기업을 할 수 있는 나라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 사유가 무엇인지를 봐야 되겠습니까마는 기업의 활동을 위축케 하거나 그런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유섭 의원 아니, 저기 재벌 혼내 주러 다니는 공정거래, 그래서 바쁘다는데……

○국무총리 이낙연 그 말이 신중치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유섭 의원 기업들 기를 좀 살려 주세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저도 기업인들을 많이 만나고 있고요. 우리 몇 대 기업의 총수님들도 차례로 뵙고 있습니다.

○정유섭 의원 3월 19일 날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제조업 활력 살리는 것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 이제 아셨어요? 프랑스·일본·미국, 트럼프·아베·마크롱 다 진짜 몇 년 전부터 이거 했어요. 대통령은 이제 아셨어요, 제조업이 중요한 것?

지금 산단 가 보세요. 매물이 산더미이고 전부 외국 나가 있는데……

○국무총리 이낙연 의원님,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것 꼭 그 날 알아서 그 날 말씀하시겠습니까?

○정유섭 의원 그러면 그동안 제조업을 위해서 하신 정책이 뭐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여러 가지……

조금 이따 담당 장관이 기회를 주신다면 더 말씀해 드릴 겁니다.

○정유섭 의원 그러면 담당 장관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감사합니다.

○정유섭 의원 부총리 나오십시오.

부총리 보시기에 현 정부에서 제일 잘한 경제 정책이 뭐니까? 그러니까 잘한 경제정책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너무 많아 가지고 제가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열심히 한 거를 제가 뜻하는 겁니다.

○정유섭 의원 그러면 일자리 정책, 정부가 일 자리를 늘리는 일을 한 게 아니라 줄이는 일을 했어요, 여태까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정유섭 의원 최저임금 올리면 사람들 자르겠습니까, 안 자르겠습니까?

공공기관에 비정규직 저기하면 채용하겠습니까, 안 채용……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저거 올려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이야기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면 안 되는 이유를 아세요? 저거 화면 보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의원님,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과거의 패턴과 같은 패러다임으로 경제를 이끌어 가기에는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그런 판단하에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것이고요.

○정유섭 의원 저거 내려 주세요, 시간이 자꾸 가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최저임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업종에는 고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올리려고 했던 이유가 양극화를 해소하고……

○정유섭 의원 그런데 제가 저 화면 왜 띄웠는지 알아요? 그냥 지나가서 그런데 저 화면 보시면 우리나라 9인 이하 기업의 소상공인에 들어가 있는 근로자가 43.4%예요. 그리고 250인 이상의 기업에 들어가 있는 고용자가 12.8%예요. 그런데 저게, 일본이나 캐나다나 영국이나 미국은 최저임금 바운더리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10~15%예요. 그런데 우리는 30~45%예요. 최저임금을 올리면 영향력이, 45%의 근로자한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우리가 업종별로 하자는 것이고 지역별로 차등하자는 것이지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의 영향력이 10%에만 미치는 게 아니에요, 45%에 미쳐요.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자영업이 너무 많고. 왜 자영업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일자리가 없어서 자영업 해요. 왜 일본보다 미국보다 자영업이 많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의원님, 자영업자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정유섭 의원 편의점 올려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그런데 이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요. 사실 한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유섭 의원 편의점 화면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편의점 알바비 제가 계산해 봤어요. 주 5일에 하루 8시간, 연장근로 12시간 그리고 기타 비용 다 합치니까 한 달에 245만 원 줘야 돼요, 편의점 알바한테. 그러니까 편의점 알바를 쪼개기를 하는 거예요. 245만 원 줄 수 있는 9인 이하 기업이 적어요. 그래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면 안 되는 것이고 이게 최저임금 10~15%에만 영향을 미치면 괜찮아요. 민주노총이 장악하고 있는 그 10% 근로자, 그 사람들 보면 안 돼요. 9인 이하에 일하는 그런 43.4%의 근로자를 보고 최저임금을 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의원님, 아까 최저임금 관련해서는 정부도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속도가 빠르게 올라갔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래서 내년부터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바꿔 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유섭 의원 부총리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아까 제일 잘한 일 말씀 못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이것 제일 잘했다고, 홍남기가 이것 했다고 그렇게 공격할 수 있는 경제정책 하나 남기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저는……

○정유섭 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갑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유섭 의원 제가 꼭 산자부장관한테 말씀드려야 돼서.

장관님, 제가 작년 국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어요.

원전 옆고 나면 무엇으로 발전할 거냐고 그랬더니 저기 그대로예요. LNG하고 석탄으로 한다 그랬어요. 2060년도에 원전 없어지고 나면 무엇으로 발전할 거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석탄하고 LNG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탈원전의 정책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는 것은 경제성하고 또 안전성과 수용성과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서 결정되게 됩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또 미세먼지에 관련돼서 석탄에 대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석을 우리가 하고 마련을 해서 국민들의 수용성, 여러 가지를 봐서 함께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정유섭 의원 장관님도 아시다시피 원전 없으면 우리나라 공급할 수 있는 전원이 석탄하고 LNG밖에 없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석탄하고 또 신·재생에너지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정유섭 의원 석탄하고 LNG 하면, 미세먼지하고 지구온난화하고 이산화탄소 국민들이 다 싫다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최대한 우리 경제상황하에서 효과적이게 하겠습니다.

○정유섭 의원 그러니까 원전도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드릴 말씀은 많은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주승용 정유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제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9분 산회)

○출석 의원(264인)

강길부	강병원	강석진	강석호
강창일	강효상	강훈식	경대수
고용진	곽대훈	권미혁	권성동
권은희	권칠승	금태섭	기동민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수

김규환	김기선	김도읍	김두관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삼화	김상훈
김상희	김석기	김선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김성찬	김성태
김성환	김세연	김수민	김승희
김영우	김영주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용태	김재경	김재원
김정우	김정재	김정호	김정훈
김종민	김종석	김종희	김종훈
김중로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대흠	김학용	김한정	김한표
김해영	김현권	김현미	김현아
나경원	남인순	노웅래	맹성규
문희상	민병두	박경미	박광온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범계	박병석	박선숙	박성중
박순자	박영선	박완수	박완주
박용진	박인숙	박재호	박정
박주민	박주선	박주현	박지원
박찬대	박홍근	백승주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서삼석	서영교
서청원	서형수	설훈	성일종
소병훈	손금주	손혜원	송갑석
송기현	송석준	송언석	송영길
송옥주	신경민	신동근	신보라
신상진	신용현	신창현	심기준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호영	어기구
엄용수	오신환	오영훈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원유철	원혜영
위성곤	유기준	유동수	유민봉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유의동
유재중	윤관석	윤상직	윤상현
윤소하	윤영석	윤영일	윤일규
윤재욱	윤종필	윤준호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규희	이동섭
이만희	이명수	이상돈	이상민
이상헌	이석현	이수혁	이양수
이언주	이완영	이용득	이용주
이용호	이원욱	이은권	이은재
이인영	이장우	이재정	이정현
이종걸	이종구	이종배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철규	이철희
이춘석	이태규	이학영	이학재

이 해 찬	이 현 재	이 해 훈	이 후 삼
이 훈	인 재 근	임 재 훈	임 종 성
장 병 완	장 정 숙	장 제 원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현 희	전 해 숙	전 희 경
정 갑 윤	정 동 영	정 병 국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양 석	정 용 기	정 우 택
정 유 섭	정 인 화	정 종 섭	정 진 석
정 춘 숙	정 태 옥	제 윤 경	조 배 숙
조 승 래	조 응 천	조 정 식	조 훈 현
주 광 덕	주 승 용	주 호 영	지 상 옥
채 이 배	천 정 배	최경환(평)	최 교 일
최 도 자	최 연 혜	최 운 열	최 인 호
최 재 성	추 경 호	추 미 애	표 창 원
하 태 경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종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 일 표	홍 철 호	황 영 철	황 회

○개의 시 재석 의원(111인)

강 창 일	곽 대 훈	권 은 희	김 도 읍
김 두 관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기
김 상 훈	김 성 원	김 승 희	김 영 주
김 영 진	김 영 춘	김 정 우	김 정 호
김 종 민	김 종 석	김 종 회	김 종 훈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김 현 미	맹 성 규	문 희 상	민 병 두
박 광 온	박 명 재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선 숙	박 완 수	박 인 숙	박 정
박 주 민	박 찬 대	박 흥 근	백 재 현
변 재 일	서 삼 석	서 영 교	서 청 원
서 형 수	소 병 훈	손 혜 원	송 기 현
송 석 준	신 동 근	신 보 라	심 재 권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호 영
엄 용 수	오 신 환	오 영 훈	우 상 호
원 혜 영	위 성 곤	유 동 수	유 민 봉
유 성 엽	윤 상 직	윤 일 규	윤 재 옥
윤 준 호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개 호
이 규 희	이 동 섭	이 상 돈	이 상 현
이 수 혁	이 원 옥	이 은 재	이 인 영
이 종 배	이 찬 열	이 철 희	이 해 찬
이 현 재	이 해 훈	이 후 삼	임 종 성
장 병 완	장 정 숙	전 현 희	정 갑 윤
정 세 균	정 양 석	정 종 섭	조 승 래
조 훈 현	주 광 덕	지 상 옥	천 정 배
최경환(평)	최 교 일	최 연 혜	최 운 열
추 미 애	표 창 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영 표	홍 철 호	황 영 철	

○산회 시 재석 의원(85인)

강 길 부	강 효 상	곽 대 훈	권 미 혁
김 광 립	김 광 수	김 도 읍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옥	김 삼 화	김 상 훈
김 석 기	김 성 식	김 성 원	김 성 찬
김 수 민	김 승 희	김 영 진	김 영 춘
김 영 호	김 재 원	김 정 우	김 정 호
김 종 석	김 종 회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김 현 미	김 현 아	나 경 원
문 희 상	박 성 중	박 순 자	박 완 수
박 완 주	박 정	박 주 현	서 삼 석
서 영 교	손 혜 원	송 석 준	송 언 석
신 동 근	신 창 현	안 상 수	안 호 영
어 기 구	엄 용 수	오 영 훈	위 성 곤
유 동 수	유 승 민	윤 일 규	윤 종 필
윤 준 호	이 개 호	이 만 희	이 상 돈
이 수 혁	이 은 권	이 정 현	이 종 배
이 진 복	이 철 규	이 철 희	이 태 규
이 현 재	이 해 훈	정 동 영	정 세 균
정 양 석	정 용 기	정 우 택	정 종 섭
제 윤 경	주 광 덕	최경환(평)	최 교 일
최 도 자	최 연 혜	한 정 애	함 진 규
홍 영 표			

○청가 의원(22인)

김 경 진	김 동 철	김 부 겸	金 成 泰
김 순 례	도 중 환	문 진 국	민 경 옥
민 흥 철	송 희 경	윤 한 흥	이 정 미
이 종 명	이 채 익	이 현 승	임 이 자
장 석 춘	정 재 호	조 경 태	진 선 미
추 혜 선	황 주 홍		

○국회 참석자

입 법 차 장	한 공 식
사 무 차 장	김 수 흥
의 사 국 장	권 영 진

○출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국 무 총 리	이 낙 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이 흥 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 유 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개 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호 모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성 현 미
해 양 수 산 부 장 관	김 현 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 중 학

○출석 정부위원

공정거래위원장 김 상 조
 금융위원장 최 중 구

【보고사항】

○상임위원 개선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국회운영	어기구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2019. 3. 20.
	강병원	박찬대		
기획재정	윤후덕	박병석		
교육	박경미	진영		
외교통일	이해찬	최재성		
	박병석	윤후덕		
	진영	박경미		
국방	최재성	이해찬		

○의안 제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

(2019. 3. 20. 이채익·김태흠·최교일·박완수·이진복·유민봉·김영우·안상수·홍문표·정인화 의원 발의)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

(2019. 3. 20. 이채익·김태흠·최교일·박완수·이진복·유민봉·김영우·안상수·홍문표·정인화 의원 발의)

군사용 사유지의 배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

(2019. 3. 20. 최재성·김병기·신창현·어기구·박홍근·윤준호·김철민·김영호·윤후덕·제윤경·박정 의원 발의)

군비통제정책기본법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

(2019. 3. 20. 최재성·김병기·신창현·어기구·박홍근·임종성·윤준호·김철민·김영호·기동민·제윤경 의원 발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2019. 3. 20. 이상민·이종걸·어기구·이원욱·이규희·안민석·전재수·이석현·김두관·정성호 의원 발의)

보편적 국제규범의 시각에서 본 대일항쟁기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 확인 결의안

(2019. 3. 20. 설훈·정세균·신창현·김경협·윤일규·백재현·전재수·김성환·김병기·이인영 의원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2019. 3. 20. 우원식·윤일규·오영훈·김상희·김병관·서영교·윤후덕·김현권·김성환·제윤경·박홍근·이학영·김중훈·인재근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019. 3. 20. 설훈·정세균·김경협·윤일규·백재현·전재수·김성환·김병기·김해영·이인영 의원 발의)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서훈 촉구 결의안

(2019. 3. 20. 천정배·권은희·김경진·김광수·김동철·김두관·김병기·김종대·김종희·박범계·박정·박주선·박주현·박지원·박찬대·서영교·설훈·손금주·손혜원·송영길·심상정·안호영·원혜영·유성엽·유승희·윤소하·윤영일·이동섭·이석현·이용주·이용호·이정미·이종걸·이철희·이춘석·인재근·장병완·장정숙·전혜숙·정동영·정성호·정인화·정춘숙·조배숙·주승용·채이배·최경환(평)·최도자·추혜선·황주홍 의원 발의)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

(2019. 3. 20. 장병완·장정숙·유성엽·최경환(평)·김종희·김경진·이용주·윤영일·정인화·김광수·천정배·박지원·조배숙·정동영·박주현·황주홍 의원 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

(2019. 3. 20. 이진복·박명재·김성원·윤재욱·박성중·추경호·유재중·정갑윤·이현승·김도읍 의원 발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2019. 3. 20. 권칠승·백재현·박정·정재호·전혜숙·안호영·윤관석·신창현·김태년·노웅래 의원 발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2019. 3. 20. 권칠승·백재현·박정·정재호·전혜숙·안호영·윤관석·신창현·김태년·노웅래 의원 발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

(2019. 3. 20. 이진복·박명재·김성원·윤재옥·박성중·추경호·유재중·정갑윤·이현승·김도읍 의원 발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2019. 3. 20. 권칠승·백재현·박정·정재호·전혜숙·안호영·윤관석·신창현·김태년·노웅래 의원 발의)

이상 15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보고서 제출

법조윤리협의회 운영상황 보고

(2019. 3. 20. 법조윤리협의회 제출)
3월 20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송부